

#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2012. 10



## 제 출 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 연구진

---

## 연구책임자

양 현 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전 수 환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홍 기 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 연구보조원

최 선 혜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과정)

---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제2장 미래 환경변화와 예술 .....	5
제1절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예술 향유층의 변화 .....	7
1. 고령화 사회 진입 .....	7
2.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 형성 .....	8
제2절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예술향유 행태 변화 .....	9
1.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삶의 변화 .....	9
2. 온라인 기반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	9
제3절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예술의 융복합화 .....	10
1. 예술 장르의 융복합화 .....	10
2. 예술 공간의 융복합화 .....	11
3. 예술 가치사슬체계의 융복합화 .....	12
제4절 예술의 가치 재발견 .....	12
제5절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 유통 .....	14
1.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	14
2. 한국 미술, 연극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	15
제3장 예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7
제1절 예술 창작 .....	19
1. 예술인 복지와 일자리 .....	19

## 목 차

2. 예술 창작 지원 .....	22
<b>제2절 예술 유통 .....</b>	<b>27</b>
1. 비영리영역 예술 유통 .....	27
2. 준영리 영역 예술 유통 .....	29
3. 영리 영역 예술 유통 .....	29
4. 해외 예술 유통 .....	31
<b>제3절 예술 향유 .....</b>	<b>33</b>
1. 예술 향유 .....	33
2. 문화예술 교육 .....	35
3. 생활예술 .....	36
4. 예술의 사회적 활용 .....	37
 <b>제4장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b>	 <b>39</b>
제1절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영역의 재구성 .....	41
제2절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45
과제 1. 예술인 복지 제고 “파편적 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 .....	47
과제 2. 예술 창작활동 지원 “단선적 지원에서 입체적 지원으로” .....	51
과제 3. 예술공간의 지역편차 해소 “편중에서 편재로” .....	55
과제 4. ‘K-Arts’ 국제교류 지원 “단선적 교류에서 종합무진 네트워크로” .....	58
과제 5. 예술의 접근성 향상 “소득기준에서 중층기준으로” .....	61
과제 6. 예술교육 강화 “선택적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	64



## 목 차

과제 7.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순수예술 지향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로” .....	67
과제 8.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육성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 단계로” .....	70
과제 9.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지원	
“단발적 이벤트 중심에서 통합 생태계 조성으로” .....	76
과제 10. 공연예술 유통의 UX(User Experience) 확대	
“전문공간 중심에서 탈 전문공연장화로” .....	78
과제 11. 생활예술의 활성화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	81
과제 12. 예술을 통한 문화통합	
“동화정책에서 상호이해 정책으로” .....	83
과제 13. 예술용품 산업 육성	
“영세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전문 산업으로” .....	85
과제 14. 예술시장 전문인력 양성	
“부분적 양성에서 체계적 육성으로” .....	88
과제 15. 국내 유통 시스템 개선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92
과제 16. 해외 유통 시스템 개선	
“산발적 진출에서 전략적 진출로” .....	95
과제 17. 기업과 예술의 결합 증진	
“후원 대상에서 가치 제공자로” .....	98

## 표 목 차

표 1 국제결혼부부 혼인율 .....	8
표 2 예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	19
표 3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 분야별 .....	21
표 4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 현황 .....	21
표 5 2007-2011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예산 .....	23
표 6 기금(적립금) 조성현황 .....	23
표 7 창작활동 관련 지원금 수혜현황 비교 .....	24
표 8 지방자치단체(사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	27
표 9 지방자치단체(사군구) 10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	28
표 10 지역별 공연장 가동률 현황 .....	28
표 11 읍면동 시설 현황 .....	29
표 12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문화예술 해외 교류 예산 비교 .....	32
표 13 예술의 3대 가치와 효과 .....	42
표 14 예술의 비영리, 준영리, 영리 영역 특징 .....	43
표 15 예술정책 영역의 재구성 .....	44
표 16 예술 정책 영역별 주요 과제 .....	46
표 17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 현황 .....	47
표 18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	47
표 19 공연·영상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직들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	49
표 20 공연예술 창작 및 향유 현황 .....	51
표 21 지방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 수 .....	55
표 22 바우처 제도 운영 현황 .....	62

## 그림 목 차

그림 1 예술의 3대 효과 .....	13
그림 2 국가별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비율 .....	26
그림 3 1997~2010년 문화예술 향수율 조사 (전체, 영화 제외 비율) .....	33
그림 4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	34
그림 5 유네스코의 문화 순환(cultural cycle) 개념 .....	41
그림 6 지식자산 수형도 .....	43
그림 7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관계 .....	44
그림 8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	45
그림 9 2000~2006년 예술분야 고용형태 비교 .....	48
그림 10 공연장 유형별 가동률 현황 .....	56
그림 11 빈곤과 배제로 인한 문화적 소외계층 .....	61
그림 12 예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81
그림 13 영국 Creative Choices 홈페이지 .....	89
그림 14 예술이 기업에 미치는 가치 9단계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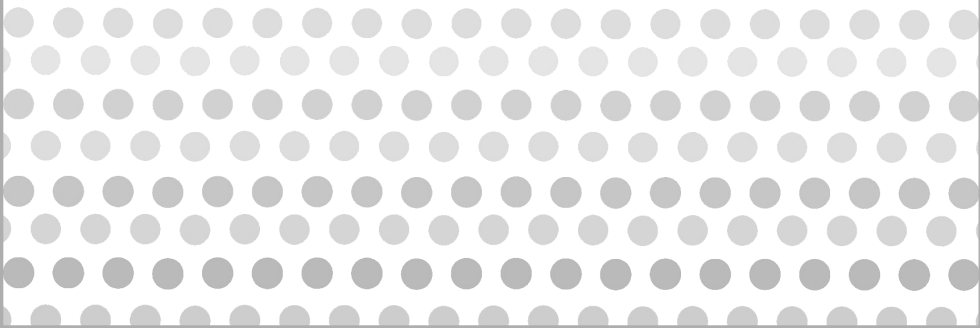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 예술정책은 2004년 참여정부가 수립한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 그리고 2008년 현 정부가 수립한 문화비전을 토대로 예술계의 발전을 다각도로 지원해 왔음
- 향후 예술의 창조적 생태계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와 예술계의 새로운 경향을 감안한 예술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가야 할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 연구는 향후 이루어지게 될 새정부 예술정책 수립 연구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주로 예술정책 패러다임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음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음
  - 제2장 미래 환경변화와 예술에서는 인구구성 변화로 인한 예술향유층의 변화,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예술향유 행태 변화,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융복합화, 예술의 가치 재발견,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3장 예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예술창작, 예술유통, 예술향유 측면에서 예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 제4장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에서는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영역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구조화한 정책영역에 입각하여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도출하였음
- 연구기간은 1개월이었으며, 연구진은 기존 예술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책영역 재구조화와 정책영역별 주요과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기간의 한계와 예비 연구로서의 제한된 성격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상세한 정책과제 도출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임







## 제2장

# 미래 환경변화와 예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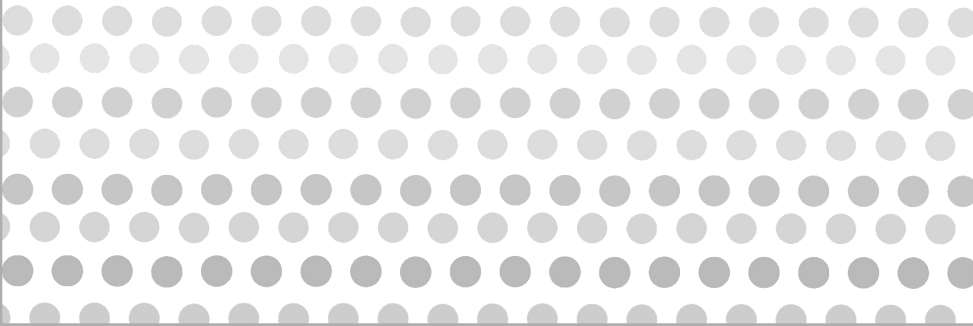
제1절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예술 향유층의 변화

제2절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예술향유 행태 변화

제3절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예술의 융복합화

제4절 예술의 가치 재발견

제5절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 유통





## 제2장 미래 환경변화와 예술

### 제1절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예술 향유층의 변화

#### 1. 고령화 사회 진입

##### ○ 2018년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여가문화 수요 증가<sup>1)</sup>

- 의학의 발전과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건강과 여가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노년층이 새로운 문화 소비층으로 대두
- 별도의 여가시간을 내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관심 증가

##### ○ 고령자의 양극화된 문화 수요 발생

- 고학력과 고소득, 시간적 여유와 문화역량을 갖춘 ‘뉴시니어층’이 새로운 문화 향유 주도층으로 대두
- ‘뉴시니어층’의 부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관광, 예술, 의료 등의 실버 시장 확대가 예상됨
- 반면 저학력, 저소득, 노년 노동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등의 요인으로 문화 향유를 기대할 수 없는 문화 소외 노년층이 형성
- 고령자라 하더라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건강, 거주 지역, 은퇴 여부에 따라 문화 수요가 양극화될 수 있음

##### ○ 고령자에 대한 문화복지의 관점 정립 필요

- 고령층의 문화수요는 다른 계층보다 균질성이 낮고 여건에 따라 다양화
- 뉴시니어층은 더욱 다양한 문화 향유와 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화 소외 노년층은 기본적인 향유 기회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문화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1) 정광렬(2011),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14쪽

## 2.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 형성<sup>2)</sup>

### ○ 다인종, 다문화 사회 진입

- 세계적인 인구이동 확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 여성, 외국적 동포, 새 터민 증가 등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
- 국제결혼의 비율은 2004년 이후 전체 혼인의 10% 이상을 차지
-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7만 명, 2010년 140만 명에서 2020년 290만명, 2040년 350만 명(전체 8%)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법무부, 2008), 자녀수를 포함하면 2020년에 전체인구의 약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

표 1 국제결혼부부 혼인율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외국인과의 혼인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총 혼인 중 비중)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증감	679	9,574	9,864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증감률	4.7	63.0	39.8	22.3	-8.5	-3.1	-3.6	-8.0	2.8

출처: 통계청

### ○ 사회적 격차로 인한 사회통합 문제 발생

- 다문화 사회 형성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특히 저소득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량속성 국제결혼 관행,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통합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증가
-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밀집돼 있는 지역(농어촌 등) 형성으로 지역간 격차도 발생

2) 정광렬(2011), 같은 글, 23-27쪽



## 제2절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예술향유 행태 변화

### 1.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삶의 변화

- 세계 스마트폰<sup>3)</sup> 사용자 10억 명, 국내 사용자 3천만 명 시대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을 전후로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이뤄짐
  - 2012년 9월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 명에 육박. 전 세계 인구 1/7이 스마트폰 사용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에서는 2009년 11월 49만 명이었던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2년 9월 3천만 명에 달하여 3년 사이에 약 60배 증가<sup>4)</sup>
- 스마트 기술이 인류 생활의 변화를 주도
  -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기술은 IT의 발전 차원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로 대변되는 인류 생활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 수행
  - 스마트폰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 문화 서비스 플랫폼’으로 정보습득,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형성, 여가활용 등을 가능하게 함

### 2. 온라인 기반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
  - 인터넷이 구축되면서 이미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채팅, 토론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음
  - 1999년 한국의 싸이월드, 2004년 페이스북(facebook), 2006년 트위터(twitter)를 통해 본격적으로 SNS 기반이 마련
  - 2012년 10월 기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는 약 2800만 명, 페이스북 940만 명<sup>5)</sup>, 트위터 640만 명<sup>6)</sup> 가입자가 활동 중

3) ‘스마트폰’은 1990년대 후반 휴대전화 제조업체 Ericsson 사가 처음으로 ‘스마트폰(Smart Pho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제품을 개발한 데서 유래

4) 『연합뉴스』,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10억 명 돌파’, 2012. 10. 17

5) 『파이낸셜뉴스』, ‘토종·외산 SNS 모바일시장 경쟁’, 2012. 10. 11

6) 트위터 한국인 인덱스 <http://tki.oiko.cc/> 자료 참고. 한국 이용자 판별 기준은 한국어 사용과 한국 내 접속으로 함. 2012년 10월 접속

○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강화

- 싸이월드의 ‘일촌’, 페이스북의 ‘친구’, 트위터의 ‘팔로워(follower)’ 등의 관계를 통해 오프라인, 온라인을 넘나들며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추세
- 관심분야, 취미, 정치적 성향, 좋아하는 것 등 특정한 주제,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경계 없이 형성
- 국가, 민족, 연령, 사회적 위치 등의 경계를 뛰어넘어 실제 생활에서 만날 수 없는 유명인사, 모르는 사람들과도 관심사가 같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음

○ 정보 생산자로서의 대중 등장

- 넓으면서도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인해 대중이 정보 수용을 넘어 생산자로 거듭남
- 기관, 기업,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온라인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여론을 형성하는 정보 생산자로 변신
- 개인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 sns, 정보 공유 사이트(Youtube 등)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대중문화 형성 가능

### 제3절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예술의 융복합화

#### 1. 예술 장르의 융복합화

○ 기술 혁신과 장르 통섭에 기반한 문화예술의 복용합 활성화<sup>7)</sup>

- 장르의 융합 또는 탈장르를 추구하는 융복합 예술이 모든 예술 장르에서 뜨거운 화두로 부상
- 공연, 미술, 전시, 문학 등의 고유한 장르가 서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 등장
- 이러한 융복합 예술은 경제 위기 및 예술지원체제의 변화, 문화예술 소비자의 취향 다변화, 그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생존에 대한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7) 정광렬, 같은 글, 33쪽. 박소현, 같은 글, 187-193쪽,



## ○ 공연, 미술계의 융복합 작품 흐름

-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영상예술과 무대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예술 탄생
- 공연예술에 무대장치 등을 3D 기술로 재현하고 가상의 입체캐릭터와 실제 캐릭터가 만나 인터랙티브 아트 퍼포먼스가 가능해짐
- 미술계에서도 ‘융복합’, ‘통섭’을 키워드로 건축·디자인·음악·연극 등 여러 장르와 통섭을 추구하는 다장르 다원예술, 미디어아트 창작이 활성화

## 2. 예술 공간의 융복합화

## ○ 영화관, 역사적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영화관이 영화 상영 이외에 패션쇼, 파티, 공연, 방송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됨(예: CGV청담시네시티)
- 구 서울역사가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옛 공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 함으로써 공연, 전시, 컨퍼런스, 사무 등의 새로운 기능이 부여됨
- 이 외에도 교회, 기업 강당 등의 공간이 지역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아짐

## ○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연, 전시 관람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Youtube, iTunes 등)를 통해 전세제로 생중계되는 공연이 나타나면서 온라인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됨
- Youtube Symphony Orchestra, iTunes festival은 온라인 중계를 기반으로 상영되는 공연
- 미술 전시에서도 작품 공개, 설명, 작가와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는 것이 매우 빈번해짐

## ○ 디지털 전광판(사이니지)에서 전시되는 미디어아트

-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건물 전면의 LED 스크린, 강남역 일대의 디지털 폴(pole) 등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늘어나면서 공공 미디어아트의 캔버스 역할을 하고 있음
- 단순한 광고판, 정보 게시판 이외에 공간과 주변 환경의 특색을 살리면서, 공공 미

술의 캔버스로서 역할이 부여될 수 있음

### 3. 예술 가치사슬체계의 융복합화

#### ○ 콘텐츠, 향유자 중심의 유통 구조 재편

- 창작자가 추축이 되어 유통과 향유가 이뤄졌던 전통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향유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
-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내용, 유통, 소비방식을 결정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켓플레이스 확산
- 크라우드 펀딩 형태를 넘어 소비자 주도의 모금과 기부문화, 소비자 주도의 프로그램 생산이 등장<sup>8)</sup>

#### ○ 생산-유통-소비의 단일 통로 형성

- 작품(콘텐츠)의 창작, 유통, 향유 수요자를 연계시키는 유통구조가 단일한 통로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발생
- 공연계에서는 연장을 중심으로 공연 기획, 제작, 상연이 이뤄지거나(예: LG 아트센터와 LG 문화재단의 공연 기획, 상연), 유통사가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예: 공연연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의 인터파크 공연장 개관)가 발생
- 미국 애플 사는 컴퓨터, 아이폰 등 기기 판매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전자책 등의 콘텐츠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기기-콘텐츠-서비스 통로를 단일화 함

## 제4절 예술의 가치 재발견

#### ○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의 발견

- 예술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발견과 가치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예술과 교육의 결합의 경우 2006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사회적,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 교육 외에 예술을 매개로 한 건강 증진, 개인의 창의성 발달, 사회적 배제 계층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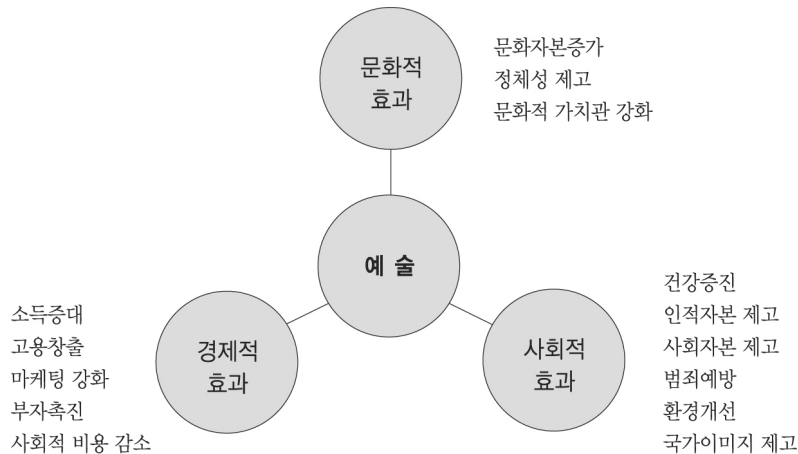
8) 전광렬, 같은 글, 37쪽





원, 범죄 예방 등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림 1 예술의 3대 효과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해외에서는 이미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추세

- 영국 및 유럽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1999년 영국 문화부(DCMS)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와 예술, 체육 활동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실제로 건강, 범죄, 취업, 교육 문제가 개선됨
- 또한 개인의 발전과 잠재능력,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발하고 공동의 노력을 가능하게하며, 다양한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지역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sup>9)</sup>
-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책임과 신뢰에 따른 지속적인 공동체 구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고양을 위해 ‘공동체의 문화발전((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운동이 전개되었음<sup>10)</sup>

9) DCMS(1999), *Arts and Sport, Policy Action Team 10: A Report to the Social Inclusion Unit*,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Helen Jermyn(2001), *The Arts and Social Exclusion: a review prepared for the Arts Council of England*, Arts Council of England, p. 5에서 재인용

10)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124-129쪽

- 문화테라피 또는 예술치료에 대한 관심 증가
  - 예술의 사회적 효과 중 개인의 심리적 치료,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예술치료는 원래 정신지체나 자폐증, 치매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
  - 행복한 삶과 정신적 가치(영성)의 추구, 친환경 및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등과 함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살과 우울증 급증, 현대인들의 심리적 불안을 예술을 통해 치유하려는 관심이 증가
- 문화산업의 확장과 예술 고유의 가치의 재인식
  - 국내 문화산업 시장의 성장,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시각이 많아짐
  - 예술의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예술의 본연의 가치 제고와 수월성 추구가 근본이 되어야 함
  - 예술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적 기반이 두텁고 풍부해질수록 이를 활용한 상품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시장과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음

## 제5절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 유통

### 1.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 ‘신한류’, ‘K-pop’ 장르의 형성
  - 2000년대 이후 형성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일본과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었음
  - 2000년대 후반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K-pop’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분명하게 자리잡음
  - 2000년대 초반의 한류와는 다른 ‘신한류’ 흐름이 세계시장에 지속적으로 대두
  - 신한류는 한국 대중문화를 앞세워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함
- 유튜브, SNS를 통한 <강남스타일>의 전세계적 인기
  - 2012년 7월 가수 싸이의 6집 앨범 타이틀 <강남스타일>이 공개되고 코믹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얻음

- 한국 가요가 이처럼 전례 없는 세계적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유튜브와 SNS를 통한 국경 없는 전파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

## 2. 한국 미술, 연극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 ○ 한국 현대미술의 꾸준한 해외 전시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신진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KOREAN EYE' 전이 영국 런던의 사치(Saatchi) 갤러리와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에서 개최되고 있음<sup>11)</sup>
-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한국실도 30년 만에 새단장. 근대 이전의 전통 미술품이 중심이지만 현대 한국미술 소개도 추진되고 있음
- MoMA, Tate Modern 등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도 한국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짐

### ○ 서울아트마켓의 개최와 우수한 성과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우수 공연예술작품을 발굴하여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하고 해외 우수 공연을 초청하는 서울아트마켓이 2005년부터 성황리에 개최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510개의 작품이 프랑스, 이란, 미국, 폴란드 등으로 진출하여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
- 2010년 월드뮤직 엑스포 '위맥스(WOMEX)'에서 바람꽃, 토리양상블, 비빙 등 한국의 예술단체들이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였고, 2011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안은미 무용단과 극단 목화 공연이 주목받았음<sup>12)</sup>

11) KOREAN EYE 프로젝트는 데이비드 시클리티라(David Ciclitira, 국제적인 스포츠 및 이벤트 기업인 패러렐 미디어 그룹 회장)가 기획하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후원하는 전시. [www.KoreanEye.org](http://www.KoreanEye.org) 참고

12) 『뉴시스』, '배후에 정재왈, 국제공연예술 짓줄 '서울아트마켓'', 2012. 9. 3





##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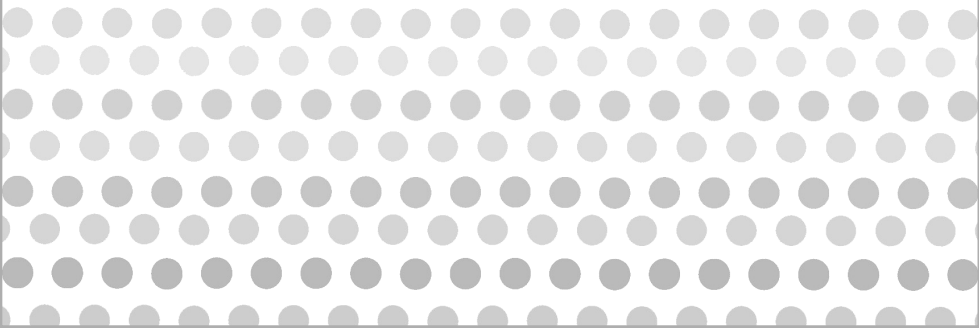
# 예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제1절 예술 창작

제2절 예술 유통

제3절 예술 향유





## 제3장 예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제1절 예술 창작

#### 1. 예술인 복지와 일자리

##### 1) 예술인 복지

##### ○ 예술인복지법 2012년 11월부터 시행

- 많은 예술인들이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의의는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임
- ‘예술인 정책’은 사회권의 관점에서 예술인이 다른 직업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임<sup>13)</sup>

표 2 예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법 제4조)
- ②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법 제7조)
-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라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법 제8조~제15조)<sup>14)</sup>

##### ○ 고용 보장 없이 자발적인 산재보험 제도만 마련

- 발의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산재보험 관련 조항만 통과
-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관련 조항이 제외됨으로써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음

13)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노동리뷰』 2012년 7월호, 7쪽

14) 박영정, 같은 글, 12쪽

- 산재보험 가입 시 필요에 의한 ‘임의가입’이며 보험료는 본인 전액 부담. 따라서 실질적인 효력에 대한 의문

○ ‘예술인복지기금’이 예술인 복지재단 내 ‘예술인복지금고’로 변경

- 발의 법안에는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의 목적으로 ‘예술인복지기금’이 들어있었으나 삭제됨
- 기금 부족으로 예술인 복지증진이라는 법제정 목적의 실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 시각미술 창작예술가보다는 공연예술가 중심의 법이라는 논란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할 사회보장 확대지원이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어느 정도 고용관계가 있는 예술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공연예술가는 단체를 운영하거나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 시각예술 창작예술가는 자영예술가나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에게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sup>15)</sup>

## 2) 예술인 일자리

○ 예술인 전체 수는 540,000명, 월평균 소득은 82만원

- 예술인 전체 수는 540,000명<sup>16)</sup>
- 전체의 62%는 문화예술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 취업상태는 자영업, 정규고용직이 39.4%이며, 자유전문직(프리랜서)과 임시고용직과 무직/은퇴자가 60.6%
- 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평균치는 82만 원
- 예술대학 한 해 졸업생 수는 약 25,000명<sup>17)</sup>

15)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리뷰」, 예술경영웹진, 2011. 11. 24, <http://bit.ly/Ucoq76>, 「예술인 복지법, 그 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예술경영웹진, 2011. 11. 24, <http://bit.ly/WsDH7C> (2012년 10월 접속) 참고하여 작성

16)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예술스태프, 예술교육가를 포함하고 무직·은퇴자 제외. 한국 고용정보원 2008년 조사,

17) 2011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중 대학통계 계열별 학생 수



표 3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 분야별

(단위: %)

자영/고용주	정규고용직	자유전문직	임시고용직	무직/은퇴자	무름/무응답
16.5	22.9	26.4	10.4	23.8	0.1

표 4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 현황

(단위: 만 원)

없다	10 이하	11~20	21~50	51~100	101~200	201 이상	무응답	월 평균수입
37.4%	5.1%	2.6%	6.9%	10.8%	13.8%	20.2%	3.4%	82

## ○ 문화예술직의 약 60%가 한시적 직업, 월 평균 수입은 82만원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예술직 종사자의 60.6%가 자유전문직(프리랜서)과 임시고용직과 무직/은퇴자
- 또한 월 평균 수입은 82만원에 그침
- 문화예술직 및 관련직 고용 현황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평균(70.1%)에 못 미치는 69.3%임<sup>18)</sup>

○ 예술전공자 수입은 수준이 낮고 불안정<sup>19)</sup>

- 예술전공자 상당수는 정규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고정 수입이 없으며, 수입 수준도 매우 낮음
- 일례로 영화산업노동자의 1년 평균 연소득은 1,221만 원
- 회사대표와 감독의 소득이 포함된 결과로, 이를 제외하면 평균소득이 더욱 낮아지며, 이마저도 45.1%가 제때 받지 못함
- 음악 전공자나 미술 전공자의 다수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졸업 후 ‘레슨 알바’ 등의 파트타임 강사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음

18) 김효정(2011),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쪽.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와 종사자에 대한 범주가 모호하고, 기존 통계자료가 불분명하여 문화예술인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고 함. 김효정, 같은 글, 41-43쪽 참고

19) 박소현, 같은 글, 127쪽

○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처우

- 창작·실연 예술인들도 일자리 개념이 유연한 경우가 많아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높은 노동유연성과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때가 많음
- 실연자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포기하거나 겸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실연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회 등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실제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2. 예술 창작 지원

### 1) 순수예술 지원

#### (1) 문화예술진흥기금

○ 2005년 이후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73년 문예진흥기금 설치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 457,794백만 원이 마련돼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목적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생활 속의 예술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속적으로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고 2011년 기금 적립금은 1999년 이전의 수준임
-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향후 저금리 추세 등을 고려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재원 조달 방식임<sup>20)</sup>

20) 윤용중(2012),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방안」,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7쪽



표 5 2007-2011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금운용 예산	519,848	474,653	419,708	397,414	360,478	259,505	266,891

표 6 기금(적립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73-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국고	124,722	-	-	-	-	-	-	-	-	-	-	-			124,722
공익 자금	65,000	2,000	3,000	-	-	-	-	-	-	-	-	-			70,000
적립금 현황	294,613	32,603	48,160	25,120	35,560	69,768	21,430	△34,341	△38,126	△21,174	△24,532	△14,239	△78,650	△53,120	263,072
계	484,335	34,603	51,160	25,120	35,560	69,768	21,430	△34,341	△38,126	△21,174	△24,532	△14,239	△78,650	△53,120	457,794

출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arko.or.kr/public/page3\\_4\\_4.jsp](http://www.arko.or.kr/public/page3_4_4.jsp) (2012. 10 접속)

## ○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문예진흥기금

- 지역문예진흥기금은 1984년 이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종자금을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조성된 기금임
- 2008년 말 현재 서울을 포함, 16개 시도의 기금 조성액은 총 4,008억 원으로 전체 조성 목표액 9,100억 원의 44.0%에 불과한 실정임
- 300억 원 이상 조성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이며 50억 원 미만은 광주, 울산,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임<sup>21)</sup>

## (2) 예술 창작 지원

## ○ 예술창작단체 지원을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예술단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지원정책

21) 양현미(2010),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쪽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단체'로 인정되며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며,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sup>22)</sup>

그러나 예술창작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함

○ 예술단체 형태에 맞는 지원제도가 부족

- 예술단체의 특성상 10인 이하의 단체가 다수를 차지함<sup>23)</sup>
- 소규모, 중규모 등 단체 규모의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 및 현재 마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이 부족
- 직접지원(공간, 운영비 지원 등) 외에 법인 형태에 따른 간접지원(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등 형태에 맞는 다면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예술인 개인의 창작 지원금 수혜 현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

-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수혜 비율이 2006년에 비해 2009년에 4.2% 낮아짐
- 또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은 민간지원보다 공공지원에 약 3배 정도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창작활동 관련 지원금 수혜현황 비교

(단위: %)

지원금의 종류	2009년 조사	2006년 조사
정부지원금(중앙정부+지자체)	9	10.2
공공지원금(정부지원금 전체+예술위원회+기타 공공기관)	13.1	16.4
민간지원금(기업+개인지원가)	4.1	5.3
전체	15.5	19.3

22) 전병태(2011), 「예술의 자생력 강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22쪽

23)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기업, 그 외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함



- 자영예술가(Self-employed artist)에 대한 제도와 지원이 부족
  - 자영업 지위의 자영예술가나 프리랜서 예술가대한 제도 마련과 지원, 제도 홍보가 부족
  - 자영 예술가에 대한 세제 부과 체계, 보험 여부 등의 제도가 불분명함
  - 창작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세금제도, 회계처리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 매우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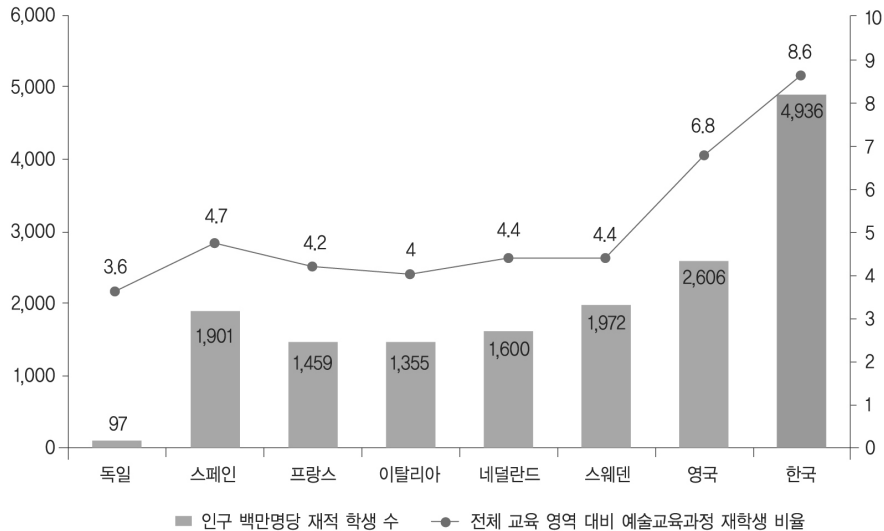
## 2)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창작 지원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
  -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활발함
  -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자로서 예술창작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과제 문제해결은 차기 정부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임
- 예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과 사회의 결합 필요
  -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문화예술 인력의 수가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
  - 예술대학 졸업생은 매년 25,000명 씩 사회로 배출하고 있으나 사회적 진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예술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예술인 중심의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예술과 사회의 결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
- 이런 맥락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심 증가
  - 2003년 ‘사회적 일자리’ 도입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은 2007년부터 인증을 시작하여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 기업 644개 중 96개(15%) 차지
  -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sup>24)</sup>
  - 또한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하고 대안적인 경제주체로 협동조

24)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 13쪽

합이 부각되고 있음

그림 2 국가별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비율



#### ○ 자립보다 지원에 의존하기 쉬운 사회적 기업의 문제

- 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재적, 제도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적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사회적 기업 인정 제도가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인력지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발생<sup>25)</sup>

####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의 지원 체계 미흡

-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술창작과 관련된 현재의 프로그램 지원체계, 예술가 육성체계, 정책 지원체계 등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25) 류정아(2011),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3-105쪽

- 사회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부 단독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 이러한 정책 연계에서 문화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제2절 예술 유통

### 1. 비영리영역 예술 유통

#### 1) 전문문화예술시설

- 전국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보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전체적인 보급 수준은 개선되고 있음
  - 공공문화시설 1관 당 평균 인구는 도서관이 65,649명, 박물관·미술관이 137,232명 (사립 포함 시 6만 명 수준), 문예회관이 253,022명
  - 참고로 OECD 국가의 도서관 1관 당 평균인원 수는 2~4만 명 수준, 박물관/미술관은 약 5만 명 수준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총 1,514개(사립 포함 1,979)로, 지자체별 평균 6.6개(사립시설 포함 8.9개), 인구 10만 명당 평균 7.16개가 건립
  - 전반적으로 도서관, 박물관에 비해 미술관의 숫자가 매우 적음

표 8 지방자치단체(사·군·구)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총계	1,514	740	319	35	192	228
평균	6.6	3.2	1.4	0.2	0.8	1.0
최댓값*	23	13	10	2	5	3
	창원시	창원시	부천시	대전서구, 안산시, 창원시	전주시	천안시

\* 제주도를 제외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댓값임.

출처: 문화관광부 보도자료(2011)

표 9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평균	7.16	2.71	1.82	0.14	1.00	1.00

출처: 문화관광부 보도자료(2011)

○ 지역별 시설 운영의 편차가 존재

- 문화예술시설의 지역별 편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역별 공연장 가동률 현황을 보면, 서울 공연장의 가동률은 70% 이상이나 그 외 도 지역은 모두 50% 이하이며 운영 부실 사례도 많음

표 10 지역별 공연장 가동률 현황

구분		공연장수(개)	가동률(%)
전체		1,093	47.0
지역	서울	385	72.6
	경기/인천	190	27.7
	강원	51	27.9
	충청	103	33.1
	전라	107	27.7
	경상	229	42.3
	제주	28	23.8

## 2) 생활문화예술시설

○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보급과 이용율은 여전히 열악

- 광역, 기초단위에 문화예술시설의 보급이 활발해졌으나, 여전히 기초 단위 중에서도 동보다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보급이 열악함
- 기초단위에 설치된 문화예술시설 중 63%가 도시(동)에 분포
-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서도 동 지역은 100%인 반면, 읍면지역은 65.7%<sup>26)</sup>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읍면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88쪽





표 11 읍면동 시설 현황

구분		합계	읍	면	동
전체	응답시설수(개)	1,025	241	136	648
	비율(%)	100.0%	23.5%	13.3%	63.2%
구성 중	응답시설수(개)	78	19	10	49
	비율(%)	100.0%	24.4%	12.8%	62.8%
구성 완료	응답시설수(개)	947	222	126	599
	비율(%)	100.0%	23.4%	13.3%	63.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3),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연구」

## 2. 준영리 영역 예술 유통

### ○ 사회적 예술유통을 위한 기반이 부재

-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하고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효과 향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제도가 없음
- 예술과 건강 증진, 예술과 사회통합, 예술과 공동체 형성 등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장기적인 지원 사업, 제도 마련이 마련되지 않음
- 단발적인 효과 연구, 가능성 논의 수준을 넘어 실제 가치 실현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

## 3. 영리 영역 예술 유통

### 1) 미술 시장

#### ○ 미술 시장 전체 거래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화랑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가 대다수지만 이때 미술품 거래는 면세라 거래를 집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미술시장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기도 어려움
-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

#### ○ 미술거래 시 과세 논란

- 미술품의 유통 과정에서 거래 주체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름

-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 법인 구매자의 구매 시 징수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 법인(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미술품 구입을 활성화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sup>27)</sup>

- 법인이 미술품 구입 시 ‘업무와 관련 있는’ 것, ‘장식·미화 등의 목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 3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 손금(비용)처리
- 미술품의 재판매 가능성이나 자산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으로 손금 가능액을 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sup>28)</sup>
- 미술품 양도 시에도 과세를 하면서 유지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재고가 필요
- 양도 시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

○ 미술 전시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가능<sup>29)</sup>

-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그러나 미술관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고 있음
-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영세한 미술단체의 부담이 되고 이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세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될 사안

## 2) 공연시장

○ 공연 시장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

- 공연시장의 경우 영화산업처럼 통합적인 통합전산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작품 수, 관객 수, 시장 규모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

27) 안창남(2008), 「비사업자의 미술품 자본소득 과세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조세법연구』 XIV-3, 120-121쪽

28) 김성규(2011),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7-29쪽

29) 안창남, 같은 글, 117-119



-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연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또한 투명한 유통한 설립을 위해 예술공간(공공, 민간 공연장 등)에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 등 통합 운영 시스템이 필요
-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일관되지 않음
-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 간에 통일된 해석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연, 문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sup>30)</sup>
  - 세법상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시행 시 영리 목적 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

#### 4. 해외 예술 유통

- 비영리 영역 예술 해외 교류의 현황
- 정부부처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
  - 지역적 포커스 설정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 방식 시도로 국제교류의 양적 질적 증가에 성과를 보임
  -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보다는 문화산업 교류(수출) 지원과 문화 홍보의 비중이 여전히 더 높음

30) 김영순(2012),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383쪽

표 12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문화예술 해외 교류 예산 비교

	구분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문화부	문화예술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등	17,334
	전통문화	국제교류 및 박물관 협력 등	4,941
	문화산업	한류진흥 등	41,701
	문화홍보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등	56,128
	문화협력	문화동반자사업(ODA) 등	56,128
	예산합계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관광 교류, 스포츠 교류, 종교 간 국제교류, 문화홍보, 문화협력 전체 포함	316,806
외교 통상부	문화예술 교류	쌍방향문화교류 등	약 1,200
	문화홍보	외교관계수립 기념 문화행사 등	약 1,700

○ 국제교류의 질적 제고와 예술가의 교류 과정 지원이 부재

- 국제교류의 대체적인 지형 파악에 성과 증가에 비하여 교류의 깊이(협력사업 및 제작 등)가 얕음
- 장시간의 협력이 소요되는 국제교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지원 구조로 인하여 협의의 불안정성 지속
- 국제교류활동의 결과 중심의 평가로 과정의 중요성보다는 경직적이고 피상적인 성과평가 및 결과평가 적용이 문제
- 또한 예술가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약에 대한 개선의 담보 상황

○ 국제문화교류의 구심점이 없이 특정 분야, 지역에 지원 편중

- 현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의 총괄·조정 수행체계 미비하여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불분명
-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의 분야, 지역적 편중이 발생
  - 순수 예술보다는 한류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분야 지원이 우세
  - 교류 지역에 있어서도 유럽·아시아·북미 등 주요 선진국 중심이며, 대중문화의 수출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sup>31)</sup>

31)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2-63쪽

## ○ FTA 등 국제통상에 대비한 저작권 문제 정비

- 한-미, 한-EU FTA 등 국제통상에 대비하여 국제교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미술, 공연, 문학 분야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각예술 분야의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공연 분야의 공연보상청구권 문제가 이미 쟁점이 되고 있음
- 관점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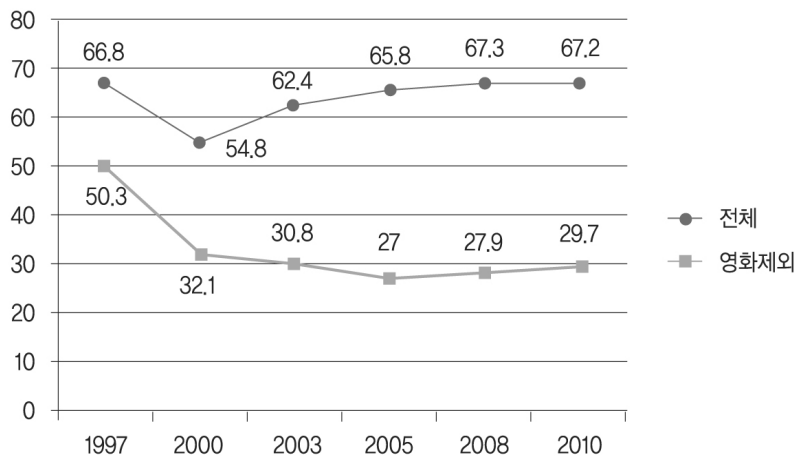
## 제3절 예술 향유

## 1. 예술 향유

## ○ 문화예술 향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 2000년 이후 문화예술의 향수율이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 추세
- 영화 관람을 제외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1년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인구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 향수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그림 3 1997~2010년 문화예술 향수율 조사 (전체, 영화 제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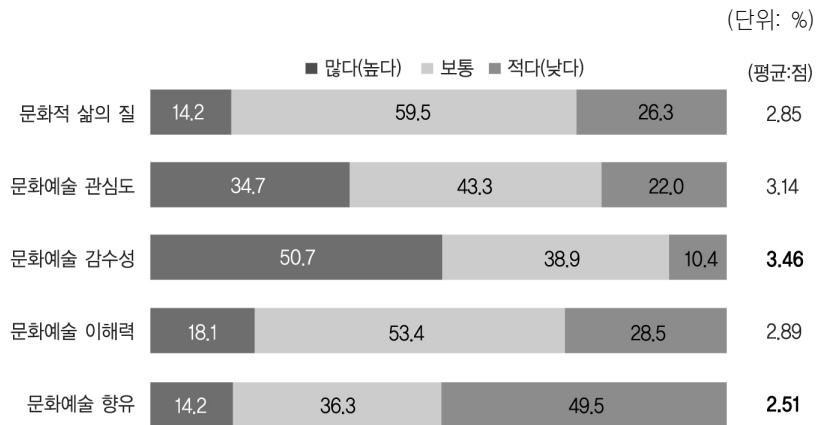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재정리

○ 예술 접근성에 대한 다면적 인식이 부족

- 예술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에는 공간적, 심리적, 경제적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공간적 접근성 향상은 문화예술 공간을 동, 리 단위 생활공간에까지 접근시켜 생활 공간과 밀접시키고 물리적 거리를 좁혔을 때 가능
- 심리적 접근성 향상은 높은 연령, 경험과 교육의 부재로 향유 의지가 없는 계층을 새롭게 향유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경제적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 외 비정규직, 학생, 실업 등의 원인으로 향유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문화예술 향유(관람과 참여)의 차이는 경제적 여건(33%), 관심과 예술적 소양(30.6%), 시간적 여유(23.5%), 거주지역(11.8%) 순으로 발생한다고 드러나, 경제적 여건과 함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도 향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음<sup>32)</sup>

그림 4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주) 5점:매우 많다(높다), 4점:많은(높은) 편, 3점:보통, 2점:적은(낮은)편, 1점:매우 적다(낮다)  
단, 문화예술 향유의 경우 '매우 적다'와 관람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 모두 1점으로 처리  
(Base : 전국 만20세 이상 남/여 1,000명)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12), 같은 글, 3쪽

○ 문화예술 소외집단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

- 문화바우처 제도 등 사회취약계층이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유의 기회를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12), 같은 글, 8쪽

증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개별사업들이 수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일원적
- 경제적 빈곤 외에 연령, 지리적 거리, 장애, 교육수준 등 문화적 소외 원인도 다양할 수 있음

## 2. 문화예술 교육

○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

- 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06년 지원법 제정 이후 사회적,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
- 중앙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크게 학교 예술강사 사업, 사회 예술강사 사업을 나누어서 실시
- 그러나 사업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sup>33)</sup>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비효율적인 체계

-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
- 그러나 예술강사 사업의 이원적 구조(일반 예술강사와 국악 예술강사의 다른 관리 체계)로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임
- 4천 명이 넘는 예술강사를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환경이 부족한 상황<sup>34)</sup>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체계의 문제

- 모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두 분야로 범주화한 것은 행정편의적 문화예술교육 구획이라는 지적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진흥원 자체의 업무 또한 단기간에 팽창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예술강사 사업 지원과 관리가 중점 사업이 되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33) 장원호(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분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7-43쪽 참고

34) 사회문화연구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2 정기국회 정책자료집(민주통합당 배재정 국회의원), 52쪽

인력양성 업무,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잘 이뤄지지 않음

- 16개 광역센터와 예술강사 사업 이관 문제 등 협력 및 업무분담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sup>35)</sup>

### 3. 생활예술

#### ○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

- 대중에게 문화를 보급하는 ‘문화의 민주화’는 넘어 대중들이 직접 문화를 창작하고 형성해가는 ‘문화 민주주의’와 ‘생활 예술’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문화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1순위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문화 예술활동 활성화’(35.3%)가 꼽힘<sup>36)</sup>

#### ○ 생활 예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와의 유대관계 형성

- 생활예술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 생활예술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질과 공동체적 유대, 집합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sup>37)</sup>

#### ○ 2004년 이후 다양한 생활예술 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

- 참여정부 시기 처음으로 생활예술 개념이 제시된 이후 지역문화정책, 문화클럽, 사회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예술 장려 정책이 실행
- 중앙정부(문화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 지방문화재단, 기업, 자생단체 등 지원(주도) 주체도 다양

#### ○ 협력적 네트워크의 부재와 기존 인프라 활용 미흡

- 지원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주무부처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중복 사업의 여지가 많음
- 지방에서 정책을 수행할 지방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나 중앙-지역, 지역에서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사이에서 지방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35) 장원호, 같은 글, 39-42쪽

3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12), 같은 글, 24쪽

37)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4쪽



-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각종 공연장, 창작공간, 예술지원센터, 동사무소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를 위한 제도가 미흡<sup>38)</sup>

#### 4. 예술의 사회적 활용

#####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 예술 고유의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이 공공재로서 사회의 다른 가치들을 제고하는 데 매개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진행
- 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제 계층을 통합하고 공동체의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예술이 공공재로서 건축, 가로, 도시계획, 공원, 문화공간 등 산업 영역과 예술창작의 창의적인 결합을 유도하고, 예술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sup>39)</sup>

##### ○ 예술을 통한 계층 간 소통 강화

- 사회의 다양한 계층 사이의 소통을 위해 예술이 활용
- 다문화 사회의 상황에서 예술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이때 외국인 이주민 등을 일방적으로 동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
- 마을, 회사, 학교,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사회구성원끼리의 유대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 예술을 통한 기업경영 혁신

- 문화예술의 가치를 기업에 접목시키는 ‘예술 기반 경영’ 등의 모델 개발이 전개
- 예술을 통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경영 환경을 변화시키며 직원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기업창의학습 지원이 가능
- 이질적인 분야 결합을 통해 예술인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추구가 가능하며, 기업인은 경제활동 원동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38)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같은 글, 121-123쪽

39) 김준기(201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정책세미나 자료집,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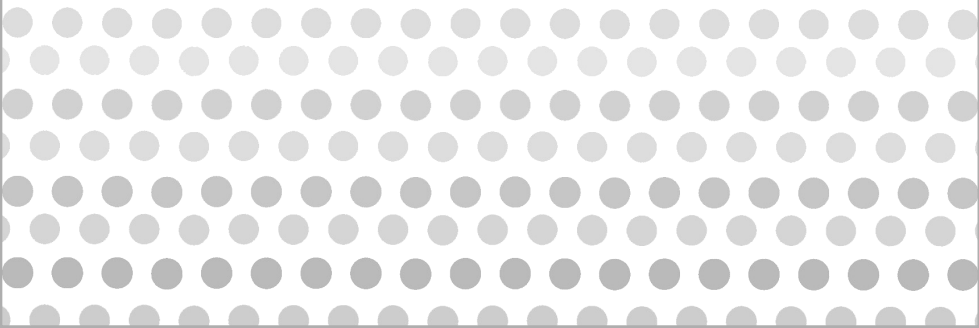
## 제4장

#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제1절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영역의 재구성

제2절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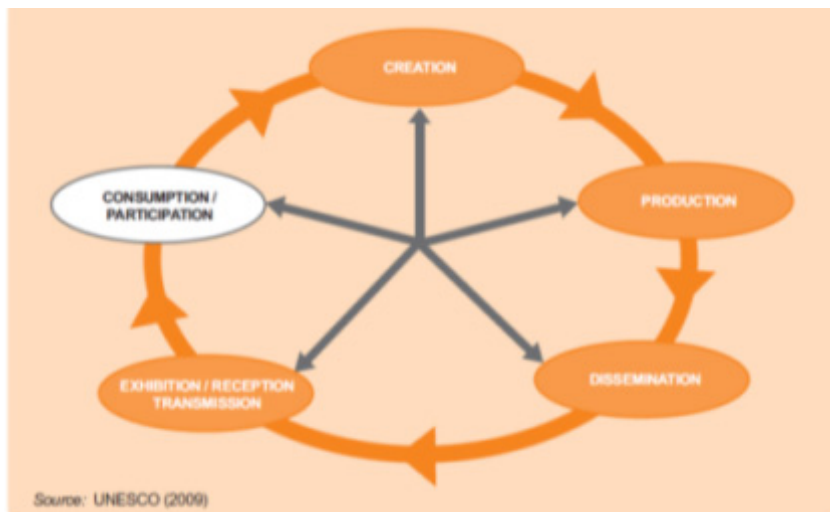


## 제4장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제1절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영역의 재구성

-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의 가치사슬체계를 고려한 지원영역 설정
  -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예술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적 생태계를 고려
  - 예술의 창작 지원만을 고민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예술의 창작, 유통, 향유 단계 모두를 활성화하여 창조적 생태계의 선순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함
  - 현재 한국 예술계의 창작, 유통, 향유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충분한 부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

그림 5 유네스코의 문화 순환(cultural cycle) 개념



출처 : UNCTAD(2010), Creative Economy Report에서 재인용

- 예술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균형적 개발을 고려한 지원영역 설정
  - 문화경제학자인 아르조 클레이머(Arjo Klamer)는 문화의 가치를 문화적(내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
  -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연구가 문화 효과 연구로서 문화의 효과는 문화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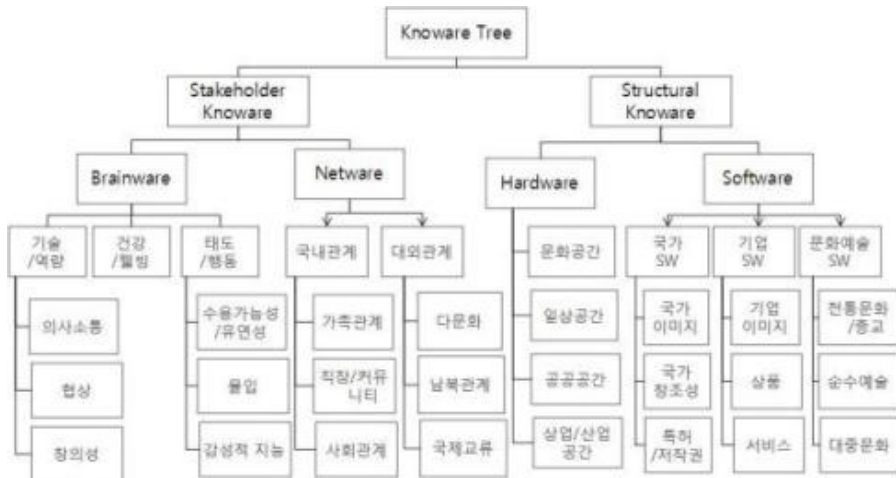
표 13 예술의 3대 가치와 효과

구분	내역
문화적 가치/효과	문화자본 증가, 정체성 강화, 문화적 가치관 확산
사회적 가치/효과	건강 증진, 인적자본 제고, 사회적 자본 및 사회응집력 제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경제적 가치/효과	소득 증대, 고용 창출, 마케팅 강화, 투자 촉진, 성장잠재력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특히, 예술기반 경영에서 유래된 지식자산 수형도를 적용하면 그동안 예술정책에서 간과되어 왔던 예술의 사회적 효과 영역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지식자산 수형도(Knoware tree)를 문화예술에 알맞게 수정하면, 크게 사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자산과 환경 및 공간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총체적 역량을 포괄하는 구조 자산으로 구성
  - 이해당사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능력 계발과 공동체의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구조 자산과 관련해서는 공간 및 환경의 개선(하드웨어)과 공간과 환경을 형성하는 국가, 기업, 문화예술 영역의 역량 제고, 가능성 모색(소프트웨어) 효과를 얻음
  - 이러한 사회적 효과는 예술의 준영리(공공)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음

그림 6 지식자산 수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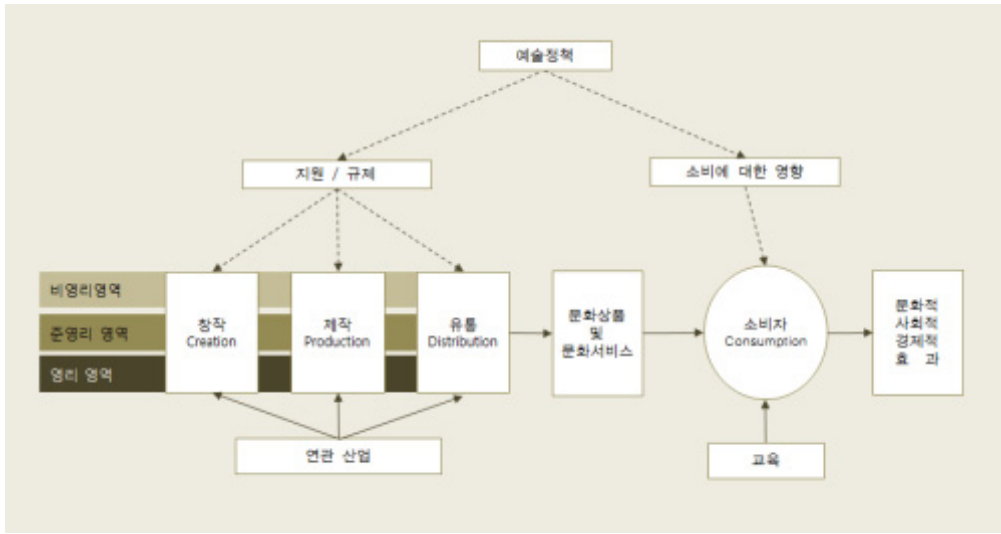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영역은 순수 예술(비영리)과 상업 예술(영리) 사이의 ‘준영리’ 영역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
- 현재 비영리(순수예술)과 영리(시장)로 이분화되어 있는 예술 영역의 중간 지대를 설정
  - 교육, 복지, 범죄예방, 통일, 노동, 농어촌, 종교, 기술 등 사회 영역과 예술의 적극적 결합을 통해 예술의 공공 서비스 확대가 가능
  -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형 시범사업과 관련 지원법 제정, 인력양성 및 관리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함

표 14 예술의 비영리, 준영리, 영리 영역 특징

비영리영역 순수예술	준영리영역 공공영역	영리영역 예술시장
미술, 음악, 무용 등 순수예술장르중심 예술생산자 중심 자율적 예술체계 기초예술대학연계 취업과 상관성 낮음 예술계와 관련됨	예술복지, 예술교육 등 사회적기능 중심 사회적서비스 중심 공공연계성 중심 대학교육 일부 연계 취업과 상관성 중간 공공영역과 연계됨	K-pop, 게임, 영화 등 대중예술장르 중심 대중시장 중심 시장연계성 높음 실용예술대학연계 취업과 상관성 중간 기업영역과 관련됨

-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연구진은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음

그림 7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관계



- 예술정책 영역을 예술의 가치사슬체계와 예술의 3대 가치를 축으로 매트릭스를 구성 하였음

표 15 예술정책 영역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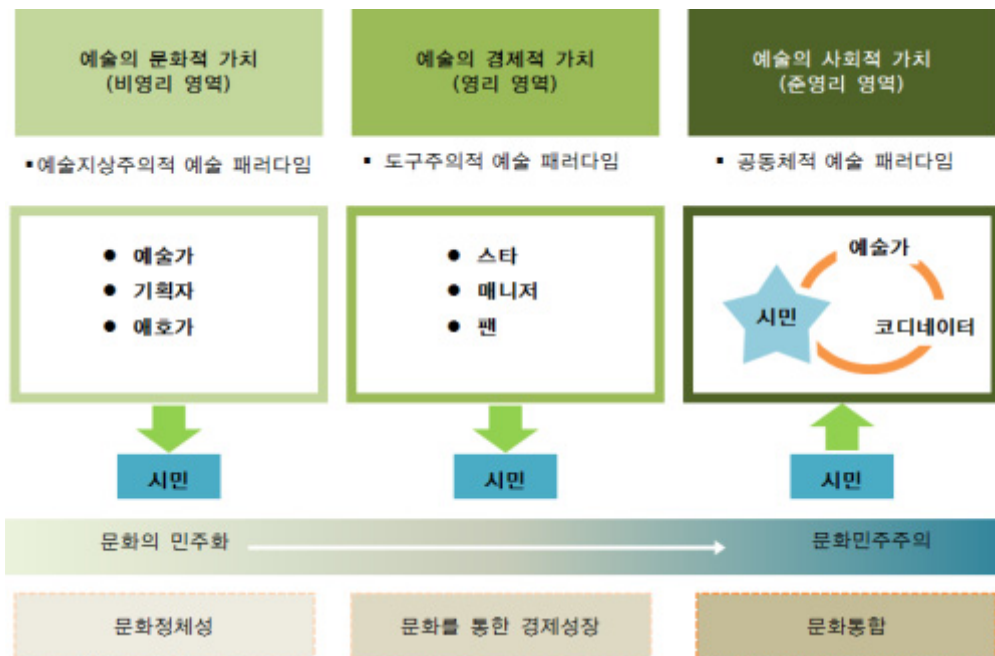
	창작/제작	유통	향유
예술적 가치 (비영리 영역)	예술인 복지 예술창작 지원	전문예술공간 국제예술교류	예술향유 예술교육
사회적 가치 (준영리 영역)	사회적 예술 창작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 예술 유통 탈 전문예술공간	생활예술 문화통합/문화치유
경제적 가치 (영리 영역)	예술용품산업 예술시장 인력양성	국내예술시장 국제예술시장	예술기반 기업경영



## 제2절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연구진은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심화
  - 예술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조화
  - 예술을 통한 문화정체성, 경제성장, 문화통합의 동시 달성

그림 8 미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 연구진은 새로 구성한 정책영역을 토대로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예술의 비영리 영역은 예술적 가치 추구를 목표로 하며, 기존 정책을 개선하여 예술 본연의 가치를 고양하고 발전시킬수 있도록 함
  - 준영리 영역은 공공적,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임
  - 영리 영역은 예술을 통한 경제적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며, 예술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타 산업과 예술의 결합을 통하여 타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과 신규 방안을 마련

표 16 예술 정책 영역별 주요 과제

	창작(제작)	유통	향유
예술적 가치 (비영리)	1. 예술인 복지 “파편적 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 2.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단선적 지원에서 입체적 지원으로”	3. 예술공간의 지역 편차 해소 “편중에서 편제로” 4. ‘K-Arts’국제교류 지원 “단선적 교류에서 종합무진 네트워크”	5. 예술의 접근성 향상 “소득기준에서 중층기준으로” 6. 예술교육 강화 “선택적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사회적 가치 (준영리)	7.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순수예술 지향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로” 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육성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 단계로”	9. 사회적 예술유통 플랫폼 정립 “단발적 이벤트 중심에서 통합 생태계 조성으로” 10. 공연예술 유통의 UX 확대 “전문공간 중심에서 탈 전문공연장화로”	11. 생활예술의 활성화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12. 예술을 통한 문화통합 “동화 정책에서 상호이해의 정책으로”
경제적 가치 (영리)	13. 예술용품 산업 “영세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전문 산업으로” 14. 예술시장 전문 인력 양성 “부분적 양성에서 체계적 육성으로”	15. 국내 유통시스템 개선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신뢰 시스템으로” 16. 해외 유통 시스템 개선 “산발적 진출에서 전략적 진출로”	17. 기업과 예술의 결합 증진 “후원 대상에서 가치 제공자로”

## 과제 1. 예술인 복지 제고

### “파편적 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

#### □ 현황과 문제점

- 예술인의 소득 및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열악성 지속
  - 예술인 소득은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가 전체 비중의 62.8% 차지
  -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28.4%, 산재보험 29.5%에 불과함

표 17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 현황

단위(만 원)

없다	10 이하	11~20	21~50	51~100	101~200	201 이상	무응답	월평균수입
37.4%	5.1%	2.6%	6.9%	10.8%	13.8%	20.2%	3.4%	82

출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9)

표 18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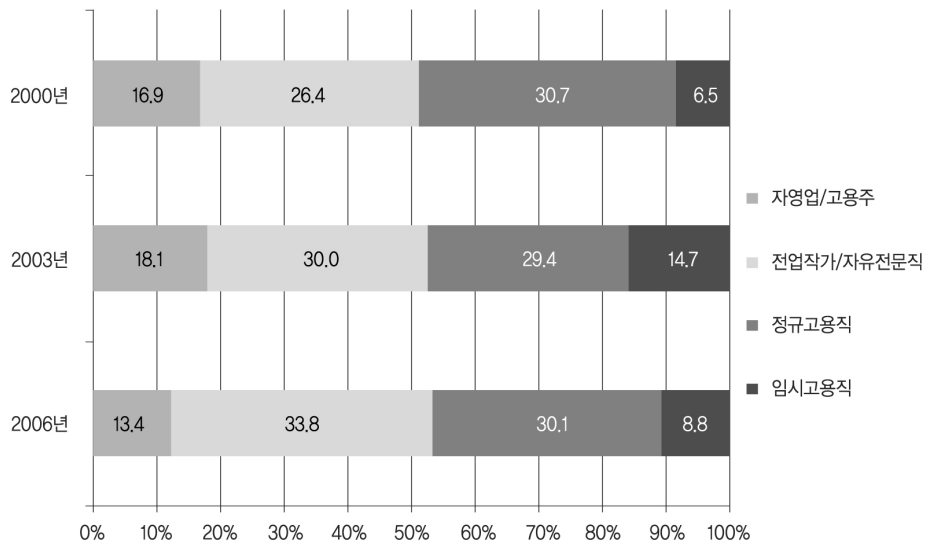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28.4%	29.5%	59.2%	98%

출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9)

- 고용 단절 시기에 대한 대책 미비
  - 고용유형에 있어서는 전업작가, 자유전문직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사회정책 실행 수준은 취약한 상황
  - 고용의 단절성, 비정규성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경력 단절의 시기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비책 부족

- 영화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인 공제회의 경우 실업부조금제도와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 목표로 함.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국가 사회보장체계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연계<sup>40)</sup>

그림 9 2000~2006년 예술분야 고용형태 비교



- 예술 장르에 따라 사회보장의 편차가 존재하며, 특히 자영 예술가로(Self employed artist)로서의 개인적 차원의 복지 설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 부족
  - 개별화된 창작 활동의 관례화로 인한 관련된 사회적 정보의 부재
  - 지원금의 종류 및 수입의 종류에 따른 과세납세 정보의 부족으로 개인적 복지 운영의 능력 미흡
-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보험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필요
  - 실업급여 적용 대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술인 경력관리 및 증명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방안 미흡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보험체계 개발 필요

40) 영화진흥위원회(2010), 『영화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 영화진흥위원회, 114쪽

## □ 기본방향 : “파편적 복지에서 포괄적 복지로”

-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복지에서 전반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복지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통합적 복지체계의 완성
  - 예술가 직종에 공히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동시에 분야 특성의 고려한 보완기제의 활성화

표 19 공연·영상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직들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 앵페르미땅 (Assurance Chômage des Intermittent du Spectacle)

프랑스에서 예술가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앵페르미땅’은 이 제도의 대상자로서, 예술 관련 업무의 특성상 비정기적으로 유한기간 계약하여 일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근로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보험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징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sup>41)</sup>

- 예술가 자립을 위한 생산적 복지 추구
  - 사회보장의 공적·제도적 지원과는 별도로 예술가 개인이 복지설계에 대한 인식 및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예술가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
- 사회보장 대상으로서의 예술가의 직업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 추진전략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준 마련
  - 기존제도(예술 장르별 복지재단)와의 보완성 혹은 독자적 운영 설계에 대한 근거 수립 필요

41) 김휘정(2011),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제25집 2호, 104쪽

- 영화인 복지재단의 경우 퇴직 위로금 및 공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영화인 공제회 설립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나 운영되지 않고 상황. 공제회의 성격상 비정규직의 회원에게서 지속적인 회비의 모금에 난점이 존재하므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국가보조공제회가 아니고는 운영의 난점이 지적된 바 이는 순수예술분야에도 유사함
-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및 경력증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예술인 개인의 활동 상황과 경력을 등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운영
  - 궁극적으로는 창작지원의 투명성 확대에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요청됨
- 예술분야별 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적용 기준 마련
  - 분야별 위험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구축
- 예술가의 노동현황 및 실태 조사
  - 예술분야별 노동 사이클(노동 투입 및 활동 특성) 전형(典形) 분석
  - 예술분야의 노동 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축적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원 제도설계에 기여
- 개인 예술가(Self-employed artist)로서의 ‘직업운영설계 매뉴얼’ 개발
  - 개인 예술가의 고용상황(자영예술가, 프리랜서예술가 등)에 따른 제 권리와 의무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 직업예술인으로서 활동 선택지(법적 지위 선택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따르는 권리 의무 정보 및 장단점에 대한 정보 제공
-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개발
  - 예술가에 대한 ‘배짱이’ 인식의 교정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 개발

## 과제 2. 예술 창작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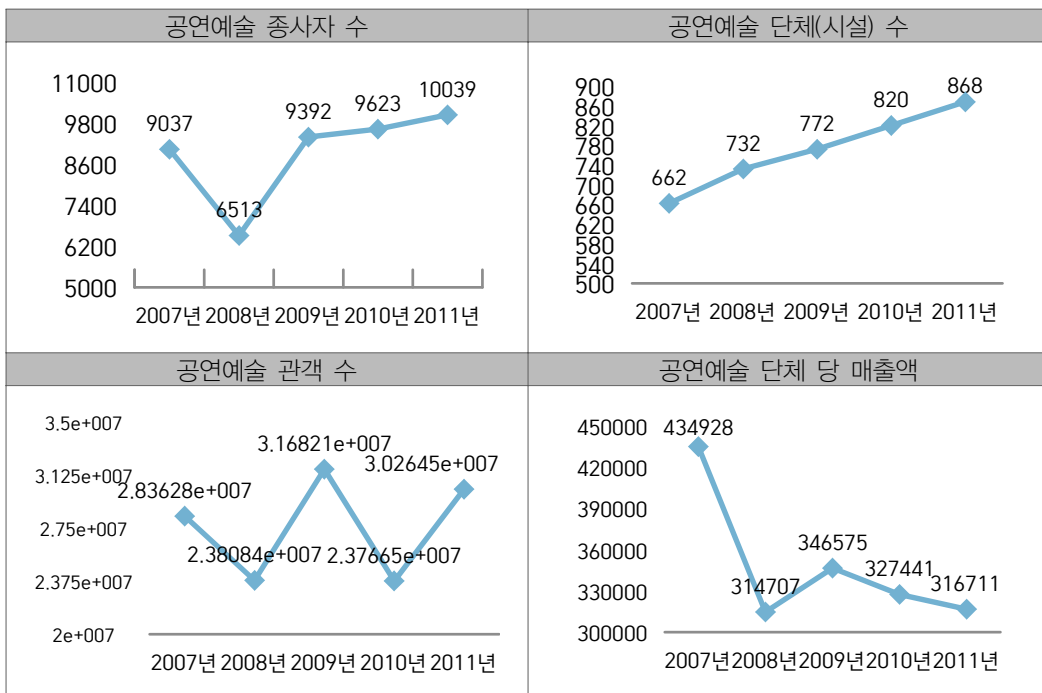
### “단선적 지원에서 입체적 지원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예술단체는 증가하였으나 관객 수는 정체

- 2007년 이후 예술계에 종사하는 단체(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객 수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 이로 인해 단체당 매출액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음
- 예술단체들의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술 향유율을 높여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방안이 시급함

표 20 공연예술 창작 및 향유 현황



출처: 전병태(2011), 「예술의 자생력 강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8쪽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2007-2012년도 통계 재구성

○ 창작 지원정책의 단절적·파편적 운영

- 창작비 지원, 국제교류활동 지원, 유통지원, 공간지원 등이 단선적이고 개별 사업 위주로 지원되어 사업의 유기적 연계성이 시너지를 발생시키지 어려운 구조
- 중앙부처, 문화예술위원회, 지역재단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적합성 높은 집행체계에 안착해 가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창작-소비-교육의 복합 활동이 어려운 단일 항목 지원 사업이 다수
-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의 경우, 세부 주제 및 항목이 많아 지원 성과 파악이 어려움

○ 창작·유통(교육)·소비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청

- 각 단계에서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창작이 그 다음 단계의 활동과 연계됨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흡

○ 섬세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지원에 대한 예술적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식이 요청됨

- 창작지원의 결과에 대한 공공적 평가 과정(예술적 및 사회적)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재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위험성에 대한 방안 미흡

- 2010년 4,020억 원, 2011년 3,930억 원, 2012년 2,690억 원으로 원 기금의 지속적인 감소 상황
- 예술창작, 차세대예술가, 국제교류,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410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 약 1,000억 원의 절반이 안 되는 비율(2011년 기준)로 순수 창작 지원의 비율이 실제로는 높지 않음

## □ 기본방향 : “단선적 지원에서 입체적 지원으로”

○ 창작의 단계별 국면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입체적 지원 실행

- 창작지원의 직접 경비지원, 창작지원도구의 지원, 창작공간의 지원, 창작과정 및 창작품의 사회화 과정 지원, 창작품 유통의 지원 등에 대한 입체적 지원



- 예술가의 창작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되고 자립 가능한 지원
  - 신진작가, 중견작가, 원로작가 등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차등지원
  - 예술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목표

## □ 추진전략

- 공간, 인력, 지원금을 연계한 예술 창작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상주단체 지원사업처럼 공간, 인력, 지원금 등 단선적 지원을 입체적 지원이 전환하기 위한 연계 지원사업 확대
  - ‘국가예술지원시스템’(가칭) 등 예술 창작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파악과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예술 창작지원을 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 개념으로 확대 운영
- 실험적 예술창작에 대한 R&D 지원사업 도입
  - 예술성이 높은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험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함
  - 예술가 및 단체의 실험적 예술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R&D 지원 필요
  - 집중지원과 일몰제의 병행운영으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지원의 순환 유도
- 창작 융복합 기술 개발 체계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 융복합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 미디어 아트와 공연, 디지털 기술과 시각미술 등 장르와 매개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작 융복합 기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및 운영
- 공연 음반 및 DVD 제작 지원
  - 시장성은 다소 떨어지나 예술성, 독창성이 뛰어난 음악이 앨범을 발간하기가 쉽지 않음(예: 국악, 연주음악 등)
  -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앨범 출간이 쉽지 않은 음반에 대해 제작 지원이 요구됨
  - 실물 음반 외에 해외 시장에 디지털 싱글, 디지털 앨범을 출간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 예술창작 국제협업기금 조성

- 협업대상 국가의 주요지원기관들과 공동기금 조성(아시아블럭 펀드 등)
- 아시아블럭 펀드 등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창작후반과정(해외진출)에 효율성 확보

○ 예술가 레지던시 전국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전국 예술가 레지던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창작 및 향유기회 확대
-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모범사례(best practice)의 수집과 학습

### 과제 3. 예술공간의 지역편차 해소

#### “편중에서 편재로”

#### □ 현황과 문제점

-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기준, 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979개
  - 지자체별 시설 수는 평균 6.6개, 인구 10만명당 시설 수는 평균은 7.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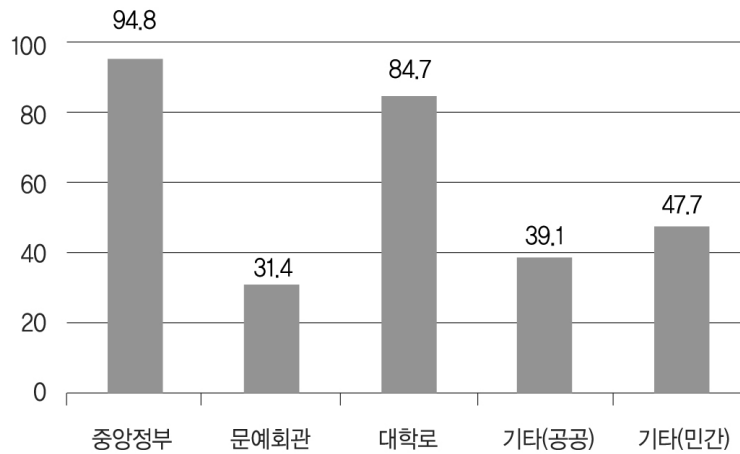
표 21 지방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 수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총계	1,514	740	319	35	192	228
평균	6.6	3.2	1.4	0.2	0.8	1.0
인구10만명당	7.16	2.71	1.82	0.14	1.00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1)

-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향상이 원활하지 않은 편
  - 공간배치의 지역편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
  - 공연장 유형별, 지역별 문화시설 가동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0 공연장 유형별 가동률 현황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12), 「공연예술실태조사」

#### ○ 생활권 단위의 예술공간 부족

- 시군구 단위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보급은 원활한 편이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정작 일상 생활과 가까운 예술창작, 향유 공간은 드문 상황
- 읍면동리 단위의 생활권에 위치한 문화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시설, 기존 시설(공간)과의 복합시설, 주민자치 시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 기본방향 : “편중에서 편재로”

#### ○ 예술공간의 정체성 강화와 콘텐츠 결합을 통한 활용률 제고

- 지역성 혹은 프로그램의 대표성 발굴을 통한 공간의 정체성 획득
- 예술공간의 콘텐츠 생산·결합 기능 증진을 통한 공간 활성화
- 상주예술단체 발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산출 및 공급
-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거점화를 통해 활용성 제고

#### ○ 생활권 단위의 예술공간 확충

- 읍면동리 등 생활권 단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공간 확충
- 기존 시설과의 연계, 민간과의 결합을 통한 공간 확보 필요

## □ 추진전략

-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지역문화 거점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 집중
  - 지역기반 예술단체 발굴, 공연예술상주단체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공연예술상주단체 지원제도 강화
  - 문화기반시설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문화기반시설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화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자치단체 결연 자매 도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와의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의 국제 마케팅 기회 제고
- 지역 예술분야 사회적 단체와의 연계로 예술공간 전문성 제고
  - 지역 기반의 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및 예술 협동조합과 연계를 통해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예술공간의 전문성 제고
  - 예술공간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 예술단체에서는 안정적인 활동영역 확보와 시장 창출, 운영 기반 마련이 가능
- ‘우리동네 예술공간’(가칭) 설립 및 운영
  - 도심 내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 교육, 창작, 전시 등 여러 기능의 공간을 통합한 생활 예술공간을 목표로 함. ‘작은 도서관’ 사업과 유사
  -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과 결합도 가능
-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예술공간 확충
  - 민간기업이 공연장, 전시장 등 예술공간 건립을 할 경우 세제혜택, 공연장 운영 프로그램 연계 등 각종 지원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기부 사업 연계하여 전문성을 갖춘 예술공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접 지원 마련 및 확대
  - 세제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예술공간의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음

## 과제 4. ‘K-Arts’ 국제교류 지원

### “단선적 교류에서 중횡무진 네트워크로”

#### □ 현황과 문제점

-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K-Pop’, ‘K-Arts’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음
  - 한국 예술을 대표하는 용어 ‘K-Arts’ 브랜드를 내세운 국제 교류 흐름이 활발해짐
  - 지역적 포커스 설정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 방식 시도로 국제교류의 양적 질적 증가
  - 특히 영리, 비영리 영역에서의 해외 진출, 국제 교류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
- 국제교류의 양적 증가에 비해 교류의 깊이(협력사업 및 제작 등)는 미흡
  - 문화예술의 교류 지원이 다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홍보 중심, 대중문화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sup>42)</sup>
  - 장시간의 협력이 소요되는 국제교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지원 구조로 인하여 협의의 불안정성 지속
  - 국제교류활동의 과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경직적이고 피상적인 성과평가 및 결과평가 적용의 문제점 존재
  - 기관 및 단체의 국제교류업무 전문 인력 부재로 역량차이가 현격하게 존재, 교류의 편중에 대한 우려 존재
  - 예술가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약에 대한 개선의 답보 상황

42) 정정숙(2012), 같은 글, 62쪽. 2012년 문화산업 교류는 지원 예산은 약 41억 원임

## □ 기본방향 : “단선적 교류에서 종횡무진 네트워크로”

- ‘K-Arts’브랜드 정착을 위한 교류의 횡단면적 네트워크 확장과 종단면적 깊이 심화
  - 미술, 공연, 문학 등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국제 교류 지원 강화
  - 국제교류의 인적자원 강화와 교류 노하우의 내재화
  - 국제교류 정보 자원 관리의 시스템화 및 공유 확산
  - 장기적 프로젝트가 가능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교류과정의 공공성 강화
- 국제교류 지원 체계 재편 및 효율화
  - 재외문화원 등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대표 기관을 설정하여 지원 체계를 재편 및 효율화
  - 지역(지자체) 국제교류 네트워크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 □ 추진전략

- 순수예술 분야 K-Arts 국제교류 지원 확대
  - 순수예술인 분야의 K-Arts에 대한 지원 비중과 예산을 단계별로 확대
  - 미술, 공연, 공예 및 디자인, 건축 등 특정 장르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도록 방안 마련
- "Connecting Networks"
  - 권역별, 국가별 유의미한 네트워크 중심 기관 발굴,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사업 지원(기존의 Connection 사업의 개발)
- 재외문화원 중심의 전문예술교류 시스템 정비
  - 한국재외문화원,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연계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상주인력이 있는 재외문화원 중심으로 해외 교류 네트워크 재편 가능
  - 국제예술교류의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창작자, 기관단체, 정부 수준(중앙 및 지방)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기능을 수행, 중요기관에 대한 인력을 파견 및 지원을 통하

여 업무의 연속성과 네트워크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지역(지자체)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자체 중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지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 사업
- 해외 주요 미술관에 한국관 운영 지원
  - 한국의 현대미술, 공예 및 디자인 작품, 건축 등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한국관 운영
  - 과거 해외 박물관에서 전통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관을 운영하던 경우가 많음
  -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예술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쇄신
- 주요 언어권 전문 마케터 육성 및 배치
  -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등 주요 언어권마다 한국 예술을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
-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공공성 강화
  - 국제교류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지원수혜자(예술가 혹은 기관)의 공공성 강화 필요
  - 공적 지원의 수혜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공공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함
- 교류파트너 국가와의 조정이 원활할 수 있는 사업기간 설정, 재정 운영 적용, 사업평가 기준 적용
-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지식과 경험의 자발적인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과제 5. 예술의 접근성 향상

### “소득기준에서 중층기준으로”

#### □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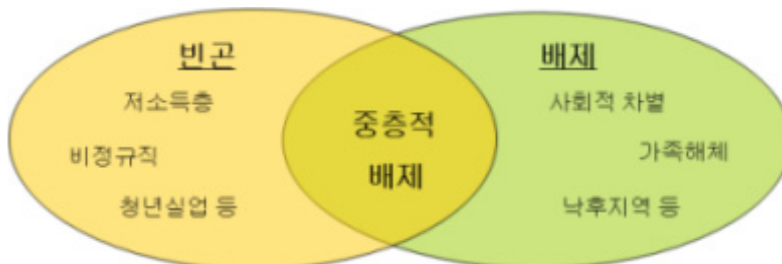
##### ○ 예술 접근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 발생

- 사회취약계층의 예술 향유 기회,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증진 노력 경주
- 문화바우처나 예술교육의 경우 주로 경제적 소득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바우처 제도 대상 외에 오히려 물리적 접근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직업특성상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소외 발생
- 동일한 기준으로 다양한 혜택을 입는 집단이 생기는 반면 어느 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

##### ○ 빈곤과 배제로 인한 중층적 소외 계층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하여 따로 기준을 적용하여 수혜자를 정하고 있음
- 직업적 차별, 장애의 종류에 따른 차별, 소득의 차별 등 복수의 기준이 겹치는 경우에 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설계가 미흡
- 중층적 배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섬세한 정책실행체계 부재

그림 11 빈곤과 배제로 인한 문화적 소외계층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소외계층의 문화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 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원인이 반드시 소득에만 있지 않고 예술향유에 대한 사회적 통념(편견)이나 선입견 등이 작용하는 경우 발생
  - 예를 들어, 지역산업의 특성(농업 등),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특정한 예술분야와만 관계될 것으로 가정하고 접근기회를 도식적으로 설계하는 경우 노인 프로그램은 전통가요 일색인 공연에의 초대, 다문화가정의 실직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만 인지하고 물질적인 보상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가능
-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바우처 운영시스템 분리로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 문화, 스포츠, 관광 바우처 운영시스템이 분리되어 별도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수혜자 1인당 1카드를 통합사용하도록 수혜자 관점에서 서비스 개선

표 22 바우처 제도 운영 현황

구분	문화	스포츠	관광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7-19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카드	1가구 1카드 청소년(10-19세), 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1가구 1카드	개인카드 복지시설 단체카드
지원금액	가구당 5만원	1인당 6만원	1인당 15만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 기본방향 : “소득기준에서 중층기준으로”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접근성 향상
  - 예술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예술향유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향상
  - 문화적 소외 계층의 재정의가 필요
  - 단일한 기준(예: 소득)으로 문화적 소외 계층을 정의하기보다는 연령, 지역, 장애, 교육수준, 직업상황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예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문화바우처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효과적으로 재편 및 운영하기 위해 기존 복지시스템과의 연계 하는 등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 추진전략

- 국민 예술향유 실태 및 특성 파악
  - 통계를 작성하는 여러 부서들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수준, 고용 여부, 장애 여부 등을 결합하여 국민의 예술의 향유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생성
  - 향후 중장기적인 예술정책 설립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술향유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중층기준에 의한 수혜대상자의 규모와 특성 파악
  - 문화적 소외계층을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 마련이 필요
  - 경제적, 소득 기준 외에도 연령, 거주지역, 신체장애 유무, 실업 상태 등 중층 기준을 정립하여 중층 배제되는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함
  - 전국적으로 중층기준에 의한 배제 계층 검색 후 규모와 특성을 파악
  - 중층적 배제가 일어나는 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예술 향수 환경, 예술 향수 특성을 연구하여 이들의 예술 향수율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 수혜대상에 따른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적 배제 기준에 따라 예술 향유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예를 들어 미취업자, 학생의 경우 향유 욕구가 있으나 소득이 낮을 수 있으므로 기존 사랑티켓의 대상을 넓혀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새로운 공연 시장 수요 창출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문화, 스포츠, 관광 바우처 관리시스템을 수혜자 1인당 1카드로 통합함으로써 수혜자 관점에서 서비스 개선
  - 복지부문의 수혜 대상과 문화복지 수혜 대상이 중첩될 경우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 전달 및 관리비용·노동의 효율화 방안 마련

## 과제 6. 예술교육 강화

### “선택적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

-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초·중등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국악 강사를 포함해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총 8개 사업에 걸쳐 총 8,615개의 학교, 4,164명의 강사 파견(2011년에는 문학과 뮤지컬 신설)
-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전국 소외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군부대, 교정 및 소년원학교 등 약 516개(2011년 기준) 시설을 지원

#####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약

- 문화예술교육 예산 중 80% 이상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투입
- 문화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보충적, 잔여적 예술교육이라는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에서 경시되는 예술교과목 교육에 대한 ‘보충적’, ‘잔여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
- 단순한 강사의 파견을 통한 장르별 예술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핵심교과목들과 연계된 ‘의무로서의 예술교육’, ‘통합적 예술교육’에 대한 관점 필요
- 수동적인 지원 업무가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학교,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전략적 사업 체계 필요

## □ 기본방향 : “선택적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 핵심 교과로서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
  - ‘통합교과예술교육’ 강화를 통하여 선택적 교육이 아닌 핵심교과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예술교육의 가치 실현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 정립
  -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예술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환경 개선
- 평생교육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 강화
  -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 강화 필요
  - 예술강사 파견 위주에서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 전환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편과 협력 체계 마련
  - 진흥원의 업무 범위 설정과 개편
  - 문화예술진흥원과 광역센터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설정

## □ 추진전략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장르 위주에서 통합교과예술교육으로 전환
  - 통합예술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부, 교육청, 대학, 문화부, 문화기반시설 등의 실질적 업무 협약 도출
  - 중장기적으로 통합교과예술교육을 발전, 지속하기 위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및 교육
  - 교육 부문과 예술계의 친밀도 제고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행정가 문화예술교육 연수기회 확대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강사 파견 위주에서 문화기반시설 거점화 전략으로 전환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개편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가 담당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유기적 관계 구축
  -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모셔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학생들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방문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술대학 교과과정 강화
  - 예술가 양성에 있어 교육인력(Teaching Artist)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대학의 교과과정 개발안 제안
  - 문화예술교육사와 TA(Teaching Artist)의 개념적 정의 및 역할의 명료화 작업 필요
  - 문화예술교육강사의 자질 요건에 있어서 문화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 활동 경험 인정

## 과제 7.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지원

### “순수예술 지향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로”

#### □ 현황과 문제점

- 아직은 미흡한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창작 영역
  -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활발함
  - 예술창작시스템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자로서 역할을 요청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예술창작과 관련된 현재의 프로그램지원체계, 예술가 육성체계, 정책지원체계 등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예술 인력의 사회 진출 및 취업이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는 문화예술 인력의 수가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나, 예술 인력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이 미흡함
  - 예술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예술인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예술 인력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부와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 체계 요구
  - 사회 영역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타 부처와의 정책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 2004년 이후 문화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24개중 15개가 2010년 이후에 체결되었음
  - 사회적 과제 문제해결이 차기 정부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부처와의 정책연계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 □ 기본방향 : “순수예술 지향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로”

###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 창작 프로그램 지원체계 확립

- 교육정책과 문화예술 간의 결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분야는 사회영역에 문화예술 정책이 개입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이외에도 복지, 범죄예방, 통일, 노동, 농어촌, 종교, 과학기술, 사회 통합, 보건 등 사회영역과 예술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함
- 이러한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술창작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고 상호소통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술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대한 전국민 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함

### ○ 사회문제해결형 예술가 육성체계 마련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가의 재교육 과정 설계 필요
- 타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예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가능
- 법제정, 자격 제도 등을 통해 법제화 필요
  - 기존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경력변환 지원체계 마련
  - 예술대학에 사회적 영역을 위한 예술교육인력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관련 과, 교원 선발지원)
- 현재의 순수예술 편향적인 대학교육 과정을 사회공헌 서비스와 연계된 방향으로 일부 변화시킴

### ○ 사회문제해결형 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연계 확대

- 사회영역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타 부처와의 정책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 2004년 이후 문화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24개중 15개가 2010년 이후에 체결되었음
- 사회문제해결이 차기 정부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 부처와의 정책연계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 □ 추진전략

-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위원회’운영
  -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
  - 예술계와 해당 사회 분야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구조
  - 위원회는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일 년간 활동하여 전략 마련
- (가칭)‘사회와 예술 비전 2020’ 마련
  -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비전으로 발전함
  - 사회 각 영역에서 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 마련
    - 예: 예술을 통한 각종 중독 치료, 예술을 통한 소아 우울증 치료
  - 예술 시스템의 변화관리 전략도 함께 마련함
- (가칭)‘사회예술정책관’및 담당부서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내 민간위원회를 지원할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TF’를 운영
  - 비전 발표에 따라 가시화된 정책에 따라서 ‘사회예술정책관’신설
  - 정책관 산하에 ‘사회예술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과’, ‘문화과학기술과’, ‘문화보건과’, ‘문화통일과’, ‘문화예술융합과’, ‘사회예술인력육성과’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예술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문화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와 같은 예술가의 사회진출 제도화
  - 예술대학에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과과정 신설 및 담당교원 확충
  -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과 연계
  - 예술가들을 위한 경력전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예술지원법’과 같은 법제도의 지원방안 마련

## 과제 8.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 “육성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 단계로”

#### □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증가가 예상
  - 2003년 ‘사회적 일자리’ 도입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새로운 법인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함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인증을 시작하여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644개 중 96개(15%) 차지
  -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sup>43)</sup>
- 또한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하고 대안적인 경제주체로 협동조합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정립
- 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재적, 제도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적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sup>44)</sup>

43)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 13쪽

44) 사회적기업의 형태 중 혼합형의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다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쉬운데, 이 경우 수입 측면에서는 정부의 사회정책인 저소득계층 지원에 의존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노동정책 특히 고용보조금제도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인건비 보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립성이 약화됨. 류정아(2011),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3쪽 ; 실태조사 결과로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타 분야 사회적기업 모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영업이익상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음. 다시 말해 타 분야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모두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인정 제도가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인력지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발생<sup>45)</sup>
- 협동조합은 아직 태동기이며 문화예술 분야의 지배적인 조직형태는 아님
  -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설립을 할 수 있어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비해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면서도 명칭에서는 공공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sup>46)</sup>
- 자립, 자생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 절실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문화의 사회적 효과를 증진하는 데 적합한 단체 형태이지만 여전히 공적 지원에 의존하여 경영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자립하고 효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신설과 개선이 필요함

## □ 기본방향 : “육성 단계에서 자생력 확보 단계로”

-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실시
  - 사회적 기업이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설이 필요<sup>47)</sup>
  - 일반 기업과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도 수정이 필요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 35쪽

45) 사회적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인원 전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조건이나, 문화예술 기업의 경우 업무에 따른 프리랜서 고용이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류정아(2011), 같은 글, 105-108쪽,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46-47쪽. 인력 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제도 자체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열의를 가진 인력이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가 다수라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99쪽

46) 허은영(2012),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3쪽

47)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2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문화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경우 주력해야 할 사업 1위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 추가’였다. 그러나 ‘신규 사업모델 개발 지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요구도 2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45쪽 참고

- 정규직 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거나, 업무에 맞는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의 형태와 질의 개선이 요구됨
- 문화예술분야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 ○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마련 연구

- 현재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가 대중화된 것은 아님
-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체제로 충족시킬 수 없는 문화예술의 공익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
-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성격과 목적을 예술 종사자들에게 이해시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추진전략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한 기존 제도 개선

-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 외에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간접 지원 강화
- 예술 분야의 업무 특성 상 모든 인력의 정규직 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정규직 채용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
-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의 사회적 기업 제도를 수정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
- 일자리 제공, 고용 측면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비,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 등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탄력성이 필요
- 이 외 문화분야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의 문제점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 마련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화부, 노동부, 지자체의 업무 협력

- 제도 개선 및 신설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sup>48)</sup>
  -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의 수정과 신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요구됨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됨. 따라서 문화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 성격을 이해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가 필요<sup>49)</sup>
- 기업체와 메세나 식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기업과 예술의 결합<sup>50)</sup>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체 간의 메세나 식 파트너십 제도 마련
  - 사회적 기업이 사내 예술교육 등을 통해 기업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매개자이자 촉매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 ‘기업과 예술의 결합’ 정책에 포함시켜 일반 기업체-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 제도 마련
- 사회적 기업 1:1 컨설팅 실시
-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 시장 정보, 홍보 및 마케팅 통로에 대한 방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
  - 사회적기업과 1:1 방식으로 운영상의 고충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자립 방안 제시(1년 1회)
- 사회적 기업-문화바우처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지원
- 문화예술 창작-향유 사슬 내에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도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과 제대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sup>51)</sup>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문화바우처를 연계하는 방안 마련

48) 2010년부터 위탁 수행

49)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104쪽

50) 류정아(2011), 같은 글, 114쪽

51) 고용노동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같은 글, 103쪽

- 예를 들어 문화예술 교육의 경우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과 연계 가능

○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사체이자 사업체’로서 조합원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임
- 이와 같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으로 법인격을 갖게 되며 사업 내용에 따라서 법인세 면에서 사단법인보다 유리할 가능성도 있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도 있음<sup>52)</sup>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적합한 단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수요 조사 후 설명회 개최(1년 1~2회)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전문 경영 인력 교육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애로점 중 하나가 경영 관리, 회계, 노무 등이 가능한 경영 인력의 부재
- 문화예술 업무라는 특성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성이 맞물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형성이 어려움
- 경영관리, 회계, 노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실시하여 향후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

○ 해외 우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계자 초청 토론회

-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립과 운영 경험을 듣고 질문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국외 단체와 국내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도록 기반 마련

52) 허은영(2012), 같은 글, 114쪽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단일 상담 및 지원창구 마련
  - 향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문화예술 계의 관심에 따라 전담 지원 창구 마련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지원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 문화부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 문화예술 분야 업무의 특성상 기업 경쟁력의 여부와 별도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정부나 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적 기업이 공익을 실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익만을 기준으로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무조건적인 지원도 문제이지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자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도록 내부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

## 과제 9.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지원

### “단발적 이벤트 중심에서 통합 생태계 조성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 사회적 예술 유통 체계 미확립

- 사회적 예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개념으로 현재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단발적 이벤트로서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음
- 사회적 예술 프로그램이 창조되고 관련 인력이 양성되더라도 사회적 예술을 유통할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수요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예술 유통 체계 정립 요구

- 사회적 예술을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새로운 유통체계가 필요함
- 사회적 예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수요 창출을 위해 활동의 장(場) 구축을 통한 기반 정립이 필요

#### □ 기본방향 : “단발적 이벤트 중심에서 통합 생태계 조성으로”

##### ○ 사회적 예술 유통 플랫폼 지원

- ‘플랫폼’이란 용어는 “여러 참여자가 공통된 사양이나 규칙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문제의 분석 및 해결에도 이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
- 사회적 예술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유통의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함



## □ 추진전략

### ○ (가칭)‘사회적 예술 지원센터’ 설립

- 지식공유 플랫폼을 사회적 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행하는 역할을 사회적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예술지원센터가 전개함

### ○ 사회적 예술 마켓 사업

- 예술복지, 예술치료, 예술을 통한 지역개발, 예술을 통한 창의교육,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예술을 통한 건강증진 등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마켓을 개최함
- 마켓을 통해서 사회적 예술이 유통될 수 있는 마당을 제시하고 해외 사회적 예술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함

### ○ 사회적 예술 중점 추진 지역 지자체 및 지원

-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예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지정하여 협력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
- 지역에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예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

## 과제 10. 공연예술 유통의 UX(User Experience) 확대 "전문공간 중심에서 탈 전문공연장화로"

### □ 현황과 문제점

- 새로운 형태의 공연과 공연유통에 대한 대비가 부족
  - 공연예술의 유통체계가 공연장 등 특정 문화공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참고로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공연법」은 전문공연장의 설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공연예술 유통의 탈 공연장화 흐름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공연예술유통의 탈 공연장화는 크게 뉴 미디어 연계, 생활공간 연계로 표출되고 있음
- 뉴미디어 연계 현황
  - 유튜브(Youtube)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한 공연콘텐츠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한국의 영화유통망을 통해서 상영되고 있음
  - SNS를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와 공연예술의 유통체계가 결합
- 생활공간과의 연계 현황
  - 기업공간, 종교공간과의 결합된 공연유통이 확산되고 있음
  - 마을 단위에서의 소규모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 왕실의 생활공간이었던 궁궐에서 공연이 재현되거나 복원된 전통공연이 펼쳐지는 등 전통공연예술의 탈공연장화가 시도되고 있음

## □ 기본방향 : "전문공간 중심에서 탈 전문공연장화로"

### ○ 공연예술 유통의 UX(User Experience) 확대

- UX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이 발전한 개념으로서 인간과 기계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인간경험을 중심으로 한 UX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공연예술 유통체계의 UX 변화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다양한 공연 형태, 다양한 창작자들을 위한 마당을 마련해야 함

## □ 추진전략

### ○ 생활공연장 지원 사업

- 교회, 절 등의 종교시설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연장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민간 공연장을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연프로그램 지원 및 극장 컨설팅을 제공함
- 동네나 마을에서 조성한 민간 공연장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여 극장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함
- 궁궐 등 문화재급 공간에서 간헐적으로 열리는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공연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
- '생활공연장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원

### ○ 뉴미디어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

- 전광옥외광고(디지털 사이니지)에 할당된 옥외광고법상의 공공구좌를 활용하여 공연예술 콘텐츠를 유통
-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예술 콘텐츠를 선별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
- 공연예술콘텐츠의 영화화를 지원

### ○ 공공 공간 유형별 시범사업 실시

- 디지털 사이니지와 결합 가능한 공공 공간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예술 문화 콘텐츠의 표현 공간을 확보 가능

-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상설 설치로 전환하거나 사업 확대를 통해 도시 명소 만들기에 기여 가능
  - 공공 공간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
- 공공 문화예술 공간 이용자의 문화 예술 경험 증진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예술 공간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 다양한 사용자 경험 제공 가능
  - 전시실, 티켓부스, 공연장, 로비공간 등 다양한 공간 유형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맞춤형 사용자 경험 제공

## 과제 11. 생활예술의 활성화

##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 □ 현황과 문제점

## ○ 보는 예술이 아닌 하는 예술로의 변화 감지

- 시민들 역시 보고 즐기는 수동형 향유에서 직접 참여하여 표현하고 창작하는 예술 향유를 선호하기 시작함
- 전문 예술가 중심이나 수동적인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 생활예술을 통한 순기능 강조

- 예술의 생활화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생활예술을 장려
-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건강, 사회통합 등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기본방향 :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그림 12 예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생활예술의 활성화

- 시민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시민이 능동적으로 예술 학습과 창작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예술정책 패러다임의 부상
- 생활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술 창작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 및 지원 기관, 민간 네트워크 지원 방안 마련

□ 추진전략

○ (가칭)「생활예술육성법」 제정

- 생활체육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엘리트 중심, 특수한 문화공간 중심의 예술정책에서 나아가 시민중심, 일상 공간 중심의 예술정책으로의 변화 방향을 밝히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률이 필요함

○ 기존 근린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통합 생활예술 지원 시설’ 마련

- 군/구 또는 마을 단위의 생활예술 지원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공간, 민간 공간의 공유 등을 검토하여 ‘통합 생활예술 지원 시설’을 만들 수 있음
- 통합 생활예술 지원 시설은 아마추어부터 준전문가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으로 주민센터, 공사립 도서관, 작은 공연장, 사설 강의실과 연습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통합 생활예술 지원 시설은 생활예술활동의 집적공간이며,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가 만나는 마당을 지향함
- 통합 생활예술 지원 시설에는 공연장, 녹음실, 연습실 및 강의실, 아카이브, 레지던시, 편의시설 등이 설비되어야 함

○ 생활예술 네트워크 지원 사업

- 영국의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처럼 예술관련 조직 간의 연합체를 지원
- 지역별, 장르별 생활예술 활동을 네트워크화 하여 궁극적으로 생활예술을 장려, 육성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축제로 발전시킴

○ 생활예술 연구지원 사업

- 전국단위의 생활예술 현황 조사 실시
- 생활예술관련 학제간 융합 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원

## 과제 12. 예술을 통한 문화통합

### “동화정책에서 상호이해 정책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다문화와 관련된 문화정책적 일관성이 부족
  - 사회통합교육 상에서의 동질화교육과 문화적 문해능력(언어,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문화관련 문화정책적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 부족
  - 이주민 및 그 주변사람만을 대상화시키는 시각
  - 다문화의 문제가 국민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인 것처럼 격리시킴

#### □ 기본방향 : “동화정책에서 상호이해 정책으로”

- 예술을 통한 다문화 소통의 강화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국인의 다문화의식 제고
  - 예술문화를 언어로 하는 소통의 기반 마련
  - 새로운 문화예술의 접촉을 통한 상상력·창의성 신장

#### □ 추진전략

- (가칭) "움직이는 예술가의 움직이는 예술(moving artist, moving art)" 개발 / “다다익통(多多益通)”
  -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가의 지역 기반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화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래밍 구성

- 유입예술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순회 활동에 활용  
예) 영국의 Visiting Arts, 호주의 Asian Link 등
- 예술강사의 다문화(DBAE) 예술교육
  - 예술강사 대상 다문화예술창작 워크숍 진행
  - 예술강사들의 세계예술(World Art) 소재로 한 다문화교육 활동 지원
- 이주민의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생활예술공동체 활동 지원
  - 이주노동자 음악 페스티벌(마석 등 집중 거주구역), 이주여성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등



## 과제 13. 예술용품 산업 육성

### “영세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전문 산업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2009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문화 통계(CULTURAL STATISTICS) 프레임워크 보고서<sup>53)</sup>는 주요 문화예술 장르를 뒷받침하는 영역 중 하나로 '용품과 재료(Equipment and supporting materials)'를 설정
  - 예술용품은 예술 작품과 활동의 도구로서, 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 과정에 필요한 용품들을 말함
  -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산업분류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UN 산출물분류표)와 SITC4(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ision 4, 국제표준무역분류)에서는 ‘공연’과 ‘시각예술 및 공예’ 부분의 용품에 각각 10개, 31개 항목을 정하고 있음<sup>54)</sup>
- 국내 예술용품 산업에 대한 현황과약도 미비
  - 우리의 경우, 예술 창작에 필요한 용품 시장에 대한 육성 연구는 물론 산업 현황과 약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산업으로 인정되는 분야도 적은 편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에 명시된 예술용품 관련 산업은 총 6개로, 악기제조업 5개(피아노, 현악기, 전자악기, 국악기, 기타 악기),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개가 전부<sup>55)</sup>

53)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54) UNESCO(2009), 같은 책, p.60, pp.70-71

55)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sub&catgrp=kssc&catid1=kssc01>

- 예술용품 산업의 현황파악 및 고급 육성정책 마련이 필요
  - 예술용품 산업의 현황파악 및 육성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예술 용품의 품질 표준화와 질적, 양적 발전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예술용품 산업 개발 시작이 요구됨

## □ 기본방향 : “영세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전문 산업으로”

- 예술용품 산업 육성의 필요성 인식
  - 전문, 생활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술용품 및 재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 화구(캔버스, 물감 등), 악기(피아노, 플룻 등), 공연을 위한 물품(의상, 조명, 스피커 등), 카메라와 필름 인화지 등 예술과 관련하여 미처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한 분야를 산업 체계에 포함시켜 전문적인 관리 및 육성 대상으로 인정
- 예술용품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
  - 소규모 영세 산업이 아니라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갖춘 전문 산업 분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 마련
  - ‘문화예술 R&D’ 개념을 도입하여 예술용품의 질적 제고 및 디지털 기술과 융합 기획
  - 예술용품 및 재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적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및 육성 정책 실시

## □ 추진전략

- 예술용품 산업 현황 조사
  -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예술용품 시장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예술장르별 용품 및 재료 시장 규모, 업체 수, 종사자 수, 유통 경로, 수출입 현황, 장르별 수입품 의존도 등
  - 생활예술용 예술용품, 전문가용 예술용품 등 용도별 현황도 조사
  -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 대상 영역을 가려낼 수 있음

## ○ 해외 예술용품 시장 조사

- 해외의 우수 예술용품 시장 현황 및 지원 정책 연구
- 물감, 현악기, 무대조명 등 장르별로 사용되는 우수한 제품을 파악하여, 이들 용품이 포함된 해외 시장 규모와 국가의 지원 정책 연구

## ○ ‘으뜸 예술용품’ 선정 제도 마련

- 현재 유통되는 국산 예술용품 및 재료 중 용도별, 품목별로 품질이 가장 뛰어난 제품, 가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 1년에 1회 ‘으뜸 예술용품’을 선정
- 우수 예술용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청 입찰이나 해외 수출 시 지원 및 혜택 부여. 또한 각 교육기관, 소매업체, 동호회 등에 안내와 홍보
- 우수 예술용품 생산 기업에게는 표창장 수여 및 세제 혜택

## ○ 예술용품 품질 인증 제도 마련

- 현재 유통되는 국산 예술용품 및 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예술 분야별 사용되는 용품 및 재료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해 세계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참여 및 독려
-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외 유통 시 세제 혜택

## ○ 우수 기업 지원 및 육성

-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 예술용품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 수출입 시 세제 혜택, 국내외 홍보 지원 등 간접지원 제공
-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나 규모가 영세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자금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육성

## ○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R&amp;D 개발 필요

-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한 전문가용 예술용품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 공연용 3D 영상 재현 프로그램
- 문화예술 R&D 기금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전문 기술 투자가 필요

## 과제 14. 예술시장 전문인력 양성

### “부분적 양성에서 체계적 육성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예술 시장의 미숙련 인력 과다, 숙련 인력 부족 현상 지속
  - 예술인의 일자리 현황과 관련하여 미숙련 인력의 공급 과잉과 숙련 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sup>56)</sup>
  - 관련 전공 졸업자의 실무 능력 부족과 단기고용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중간관리 인력 부족
  - 교육 과정과 현장의 연계 부족으로, 관련 학과 배출 인력 현장 투입 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전공자들 역시 직업현장과 연계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sup>57)</sup>
- 순수예술 창작자 중심의 인력 교육의 한계
  - 현재 예술 분야 인력 양성 정책은 미술가, 음악가 등 순수예술의 창작자 중심으로 전개
  - 재원조성 전문가, 미술품 경매 전문가, 공연 저작권 관리 전문가, 영어권 공연 마케터 등 예술계에 반드시 필요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교육 지원이 희박
- 예술산업 관련 직업 정보 및 교육기관 부족
  - 예술산업 분야에 진입하더라도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통해서 업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전문가 양성이 힘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도 힘들

56) 김효정(2011),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2010),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허은영(2010),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7) 김효정(2011), 같은 글, 3쪽, 52쪽

- 예술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도 직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영국의 경우 창조산업 내 장르별로 관련된 직업 소개, 직업을 위한 교육기관을 안내하고 구인정보까지 찾아볼 수 있는 ‘Creative choices’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sup>58)</sup>
- 예술 시장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순수예술의 창작 및 유통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술 시장의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함



그림 13 영국 Creative Choices 홈페이지

## □ 기본방향 : “부분적 인력 양성에서 체계적 육성으로”

### ○ 전문 분야 인력 양성 지원

- 예술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예술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국내외 교육기관 정보 제공, 우수 인재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통해 다각도의 지원
- 예술 시장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층이 순수예술 창작자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58) <http://www.creative-choices.co.uk/>

## □ 추진전략

### ○ 예술 산업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업무분야별, 장르별로 예술 산업 전문 직종 현황 파악
  - 재원조성 전문가, 미술품 경매 전문가, 공연 저작권 관리 전문가, 영어권 공연 마케터 등
- 직접 지원 방안 마련
  - 재원 조성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sup>59)</sup>
  - 공연, 미술, 영화 등 예술 산업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사업 운영(시범 운영 후 확대)
  - 대학교 등 교육기관 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신설 지원
- 간접 지원 방안 마련
  - 교육기관 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신설 유도
  - 온라인에서 국내외 전문가 교육 기관, 프로그램 정보 제공(기존 운영 기관 사이트 연계 혹은 신규 사이트 운영)
- 해외 시장 확장을 목표로 두고 세계적인 기준에 달하는 전문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함

### ○ 전문 인력 리스트 확보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가 인력 풀(pool) 구축
- 공연, 미술, 축제 등 장르별로, 제작, 저작권, 해외유통 등의 기능별로 세밀하게 분류하여 장르별-기능별 풍부한 전문가 인력 리스트 축적

### ○ 예술 산업 전문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대상으로 장르별 예술 산업 전문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공연기획, 미술품 경매 등 현재까지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분야를 우선으로 프로그램 마련
- 인턴십 참여 기업 및 단체에게는 세제 등 간접 혜택 제공

59) 예술계 외부로부터 새로운 재원을 끌어들이는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 2010년 1회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되었음. 허은영(2010), 같은 글, 76-77쪽 참고

- 국내외 예술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업 소개 강연 개최
- 우수 종사자 해외 연수(재교육) 지원
  - 예술 산업의 종사자가 해외 기업 및 단체에서 전문 실무 경험을 쌓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연수 지원
  - 직접적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보다 국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비용 일부 지원
- ‘예술계 전문가 100명’ 직종 안내 홈페이지 운영
  - 영국의 사례처럼 예술 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종과 관련 교육기관을 소개하고 일자리 정보까지 제공하는 가칭 ‘예술계 전문가 100명’ 온라인 사이트 신설
  - 예술 산업 진입을 원하는 청소년, 청년층에게 전문 직종과 업무의 내용, 교육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줌
  - 예술 산업 종사자에게는 재교육과 일자리 정보를 통해 전문성 증진
  - 예술 분야의 직종 소개에서 시작하여 향후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직종 소개로 확장될 수 있음

## 과제 15. 국내 유통 시스템 개선

###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 현황과 문제점

- 예술 유통 시스템은 불투명하고 체계적이지 않음
  - 미술 시장의 경우 화랑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가 대다수이지만 화랑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집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sup>60)61)</sup>
  - 공연시장의 경우 영화산업처럼 통합적인 통합전산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작품 수, 관객 수, 시장 규모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
- 예술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 미술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시장실태조사’, 공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시장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 시장에 대한 정확한 규모 산출이 어려움
- 예술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투자 미흡
  - 불투명하고 파편화된 유통 시스템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유통 시스템의 불투명함 때문에 기업 별, 기업의 업무 별 부가가치세 등 세제 부과의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60) 2010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작품판매금액은 약 4천 5백억 원이며, 이중 화랑에서 거래된 금액은 약 3천 4백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10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35쪽

61) 미술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화랑에서의 미술품 거래는 면세거래로 규정되어 거래량이나 거래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며, 경매시장은 거래 내역의 파악은 쉬우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음. 한국조세연구소(안창남)(2009),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51집, 한국세무사회, 48쪽 참고.



## □ 기본방향 :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 국내 유통 시스템 개선

- 지속적인 시장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유통체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과 통합적인 유통체계 정립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편 및 신설이 요구됨
- 미술 시장의 경우 화랑에서의 거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세제 부과 혹은 정보 공시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공연 시장의 경우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 공연 시장 전체 규모와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유통 시스템과 함께 세제 제도를 명료하게 정비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와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

## □ 추진전략

### ○ 합리적인 미술 유통 시스템 구축

- 합리적이고 투명한 미술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양도소득세 등 거래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사업체(화랑 등)의 거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토론회, 연구를 통해 합의 도출
- 미술계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실행
- 미술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한 시장 정보 축적

### ○ 공연 분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공연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공공, 민간 분류, 혹은 제작, 유통, 향유 측면의 분류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깊이를 결정
  -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향후 공공, 민간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용됨
- 통합정보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공연권 예매 회사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유통 과정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 공개 의무화

○ 공연 시설의 통합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 투명한 유통망 설립을 위해 국공립 공연장 및 문예회관, 민간 공연장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등의 통합 운영시스템 도입
-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도입 시점을 위한 연구 및 토론회 실시

○ 세제 제도 정비

- 공연 시장의 경우 순수예술공연(비영리 공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제도가 있으나 순수예술공연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음. 이처럼 부가가치세 부가, 면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미술 시장의 경우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처리 한도액(300만 원)이 낮아 기업의 구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
- 유통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관련 세제 제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비가 중요함
- 시장 위축을 막는 제도를 고려함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와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

○ 정확한 예술 시장 정보 공개

- 미술, 공연 분야의 투명한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정보 공개
- 정확한 시장 규모, 거래량 등의 정보를 통해 향후 지원 방법,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 마련

○ 예술 시장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 현재 예술 시장의 유통 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 개최
- 비영리, 영리 등의 지향점에 따라 유통의 성격과 문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야를 나누어 문제점을 진단 후 해결방안 모색

## 과제 16. 해외 유통 시스템 개선

### “산발적 진출에서 전략적 진출로”

#### □ 현황과 문제점

- 예술작품의 수출입 창구 불분명
  - 국내 예술작품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지원, 상담 창구가 분명하지 않음
  - 해외 예술작품의 한국 시장 진출, 혹은 수입 과정에 대한 지원 창구 부재
- 해외수출 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ARKO-PAMS 협력사업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서울아트마켓,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
  - 여러 기관에서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통합적, 전략적인 수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FTA 등 국제통상협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작권 제도 정비 미흡
  - 국제통상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미술, 공연, 문학 분야의 저작권 대응방안 마련 시급

#### □ 기본방향 : “산발적 진출에서 전략적 진출로”

- 해외 유통 시스템 개선
  - 국제 통상 지원의 목표와 창구를 명료하게 정비함으로써 예술 시장의 확대 지원
  - 다소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지원 기관을 통합하여 수혜자가 목적에 따라 정확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정비
  - 국제 통상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저작권 이슈(미술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등)에 대비하고 민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수출 외에 수입 혹은 해외 작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지원 기관 명시

## □ 추진전략

### ○ 해외 유통 지원 체계 정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수출, 수입 지원 사업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
-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혹은 사업 성격을 달리 하여 이원화하는 방향을 논의
- 수혜자 중심의 명료한 지원 체계 마련

### ○ 국제통상협정 체결 대비 제도 정비

- FTA 등 새로운 국제 통상 체결에 대비하여 예술 통상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저작권 등의 정보 구축
-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공연보상청구권 등의 이슈를 정비하여 예술 통상과 관련된 입장을 확립
-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비자 등의 문제와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

### ○ 한-미, 한-EU FTA 예술 통상 대책팀 운영

- 현재 예술 통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미, 한-EU FTA를 전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팀 운영
- 한-미, 한-EU FTA 예술 통상 문제 포럼 개최
  - 현재 예술 통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수집하고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마련
- 예술 관련 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제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 해외 교류, 통상 포함 One stop service 창구 마련

- 영리, 비영리, 민간 교류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창구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상담, 지원하는 단일 창구 마련

- 상담을 통해 목적에 맞는 적합한 지원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구축 가능
- 해외 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세금, 회계 문제까지 단일한 창구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예술 통상 및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 해외 교류와 국제 통상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
- 비영리, 영리 부분의 교류 문제를 상담, 해결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배치
- 예술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

## 과제 17. 기업과 예술의 결합 증진

### “후원 대상에서 가치 제공자로”

#### □ 현황과 문제점

- 기업과 예술이 지속가능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과 수혜 관계가 아니라 대상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단계로 발전해야 함
- 현재의 기업과 예술의 결합은 예술을 위한 기업의 후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향후에는 그와 동시에 기업을 위한 가치제공자로서 예술의 포지셔닝이 시작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ARCOM 사업’(예술을 통한 기업창의학습지원 사업)을 통하여 예술이 기업을 위한 가치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 예술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는 주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고를 위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동아리활동 지원, 직원들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의 본질적 가치 창출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연결된 예술의 가치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 기본방향 : “후원 대상에서 가치 제공자로”

- 기업과 예술의 결합 증진
  - 기업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연구하는 경영학자인 Schiuma는 기업경영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유형화한 바 있는데 기업 내 자산화 정도가 높고 기업구성원의 변화 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기업과 예술의 결합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함
  - 기업을 위한 예술의 가치가 오락, 유흥의 제공에서 관계강화, 기업환경 변화, 직원 능력개발, 직원 사고방식과 행동변화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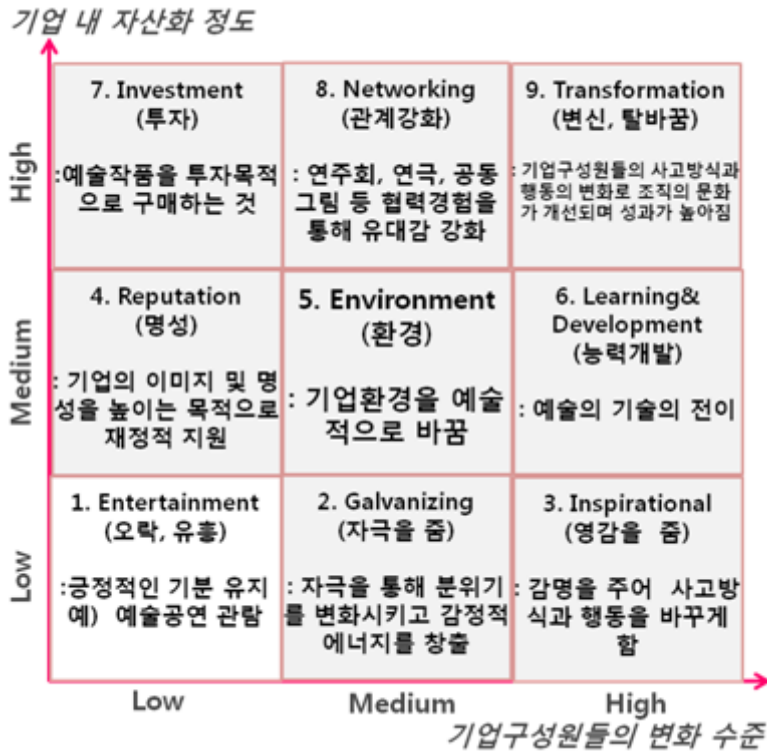


그림 14 예술이 기업에 미치는 가치 9단계

## □ 추진전략

### ○ 예술기반 경영 지원센터 운영

- 예술분야를 위한 경영 방식인 기존 ‘예술경영’이 아닌 기업경영 분야를 위한 예술 정보, 가치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예술기반 경영’ 지원 센터 운영
- 예술기반 경영을 통하여 기업과 예술이 일방적으로 도움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예술이 기업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력 증진, 복지, 대인관계 분야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 예술기반 경영 아카데미 운영

- 예술기반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진들을 위한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예술기반 경영에 대한 교과목을 경영학과와 예술경영과에 설치 운영
- 예술기반 경영 전문가(사내 상주 혹은 외부 컨설팅 등)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 예술기반 경영 추진 기업 지원

- 예술기반 경영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 제도 도입
- 예술기반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담당자들 간 협의체를 지원